



주간 통일정세

2010-30

Contents

- >>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김정일, 평양제사·방직 선전대공연 관람(7/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예술소조와 평양방직공장 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을 관람
 - 중앙통신은 합창 ‘장군님은 우리 아버지’, 여성중창 ‘우리 공장구내에서 피플새 노래하네’ 등의 공연 내용에 대해 김 위원장이 만족을 표시하고 “군중문화 예술활동을 강화할 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은 또 “노동계급이 대고조의 진군 나팔소리, 혁명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리라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덧붙임.
 - 이번 공연 관람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우동측 국방위원,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경희(경공업)·태종수·김양건(통일전선) 당 부장이 수행

- **北…회령, 청진에 반체제 전단(7/23, 아사히신문)**
 - 북한 함경북도 회령과 청진 등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이 뿌려져 북한 당국이 범인 검거에 나섰다.
 -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4~25일 회령시에 ‘장군님(김정일)은 21세기의 빛나는 태양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은 암울뿐’이라거나 ‘김정일 시대를 끝내자. 우리는 밥을 먹고 싶다’는 내용의 전단 수십장이 살포
 - 북한 치안 당국은 전단을 회수해 불태우는 한편, 전단을 뿌린 인물을 찾으려고 치안부대를 총동원하고 있음.
 - 또 지난달 하순 청진에 있는 김일성 전 주석의 동상 주변 등에서도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북한 돈 5천원권 지폐가 대량으로 발견되었으며, 지폐에는 ‘망명구국행동대’라는 단체 명칭이 적혀 있었다고 덧붙임.

- **北김정일, 평양교예단 공연 관람(7/24,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교예단의 종합교예(서커스)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
 - 평양교예단은 체력교예 ‘다각비행’, 수중교예 ‘집체조형’, 희극교예 ‘두 동무’, 동물교예 ‘곰 줄넘기’ 등 국제교예축전에서 금상을 받은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으며, 김 위원장은 공연 관람 후 “사회주의적 민족 교예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사회주의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을 옹계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날 공연 관람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방위원,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당 중앙위 부장들인 장성택·김경희, 태종수·김영일·김양건 등이 수행

● 北, 전군·전민에 비상경계 태세 지시(7/24,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 국방위원회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보복성전’을 다짐한 가운데 북한이 전군, 전민에 비상경계태세를 지시했다고 전함.
- 이 방송은 ‘함경북도에 주둔한 북한군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 “북한 군부가 전체 부대들에 ‘미제와 남조선괴뢰군이 동해상에서 벌이는 군사훈련은 우리나라(북)를 겨냥한 예비침략전쟁’이라고 전달했다”면서 “북한군 각 군단과 특수병종, 기계화 부대와 민간 교도대 무력까지 모두 군사훈련에 들어갔다”고 전함.
- 소식통은 “7월 1일 ‘하기훈련’이 시작돼 북한군은 이미 훈련에 동원된 상태로, 북한군 총참모부는 ‘하기훈련’과 관련한 ‘인민무력부 훈련요강’을 각 부대에 하달한 뒤 최근 추가로 지시문을 내려 보내, “적들의 군사연습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만 만약 덤벼들면 단매에 처부셔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 김정일동향

- 7/19 김정일, 박리군 노인(女, 平北 룡천군 신암리)에게 100살「생일상」전 달(7/19, 중통)
- 7/20 김정일,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예술소조원들과 평양방직공장 기동예술선 동대 공연 관람 및「감사」전달(7/20, 중통·중방)
·김영춘(인민무력부장), 김정각(軍 총정치국 제1 부국장), 리영호(軍 총참모장), 우동측(軍 대장), 장성택(黨 부장), 김기남(黨 비서), 김경희·태종수·김양건(黨 부장들) 등 동행 관람
- 7/21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에서 모범을 보인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7/21, 중방)
- 7/21 김정일, 강심환(김일성훈장 수훈자)과 허철룡(北적십자종합병원 교수)에 게「생일상」전달(7/21, 중방)
- 7/24 김정일, 평양교예단 공연 관람(7/24, 중통)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측 국방위원,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당 중앙위 부장들인 장성택·김경희, 태종수·김영일·김양건 등이 수행



■ 기타 (대내 정치)

- 대계도간석지 완공(6/30) 관련 “21세기의 장쾌한 기적, 위대한 창조물, 김정일의 선군영도력” 등으로 선전 및 주민의 “당대표자회와 당 창건 65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자”고 분발 선동(7/19, 중통·노동신문·중방)
- 과학기술적 성과를 이룩한 지식인들에 대한 국가학위학직 수여식, 7/21 진행(7/22, 중통)
- 원산농업대학 실장 박제은에게 원사칭호,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오희복·강좌장 임태근·김책공대 교원 이봉식에게 후보원사칭호 수여 등
- 당대표자회는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는 뜻깊은 계기로 된다”며 주민은 “김정일을 일심단결의 유일한 중심”으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간직하고 김정일의 두리에 굳게 단결할 것” 강조(7/22, 중통·노동신문)
- <전승절> (7/27,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57돌 경축 청년학생들과 전국 직맹 일꾼-직맹원들의 웅변모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각각 진행(7/22, 중통)

나. 경제

● 北쌀값 kg당 1천원 돌파(7/20, 데일리NK)

- 북한의 쌀값이 kg당 1천원을 돌파하는 등 식량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외화사정 악화에 장마까지 겹쳐 주민들의 식량 확보에 비상이 걸림.
- 매체는 “지난 18일 함경북도 회령의 쌀값은 kg당 1천50원으로 지난 1일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올랐다”며 “양강도 계산, 신의주의 쌀값도 각각 1천원, 950원대로 폭등했다”고 밝힘.
- 평양 내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은 지난 5월 ‘6~8월까지 각 지역, 단위별로 식량문제를 자체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미 6월부터 소규모 공장 노동자에 대한 식량 배급이 중단됐다고 소개하였으며, “노동자들이 기업소 주변 텃밭에서 채소나 곡식류를 수확해 나눠 가지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기업소도 얼마 되지 않아 식량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임.
- 탈북자 학술단체인 ‘NK지식인연대’도 20일 “쌀값 상승의 원인은 북한 당국의 달러지급 중단”이라며 “최근 북한의 외화사정이 악화되면서 당국이 지난주부터 외화별이 기관에 대한 달러 지급을 금지(중단)했다”고 전함.
- 이 단체에 따르면 함북 무산시장에서는 지난 14일까지 kg당 700원에 거래되던 쌀이 3일만에 1천200원으로 폭등했고 같은 기간 옥수수 가격도 400원에서 600원으로 올랐음.



● **中, 라진이어 청진항도 확보...9월 개통(7/22, 연합뉴스)**

-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시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변하이화(延邊海華)무역공사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청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했다”며 “투먼 통상구에서 북한의 남양을 거쳐 청진항으로 가는 화물 철도수송에 대해서도 북한 철도성과 합의를 마쳤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연변하이화공사는 오는 9월부터 청진항에서 부산을 오가는 컨테이너선을 운항할 계획이며 곧 중국 남방지역 화물 운송에도 나서게 될 것”이라며 “청진항 항로 개척에 따라 투먼을 통한 대외 무역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
- 연변하이화공사는 중국의 3개 물류업체와 해상 운송계약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1천만 위안(18억 원)을 들여 청진항에서 컨테이너 운반에 사용될 크레인 제작에 나섰고 투먼-청진 간 철도 수송에 쓰일 50량의 화물 열차를 이미 북한에 보낸 데 이어 150량을 추가로 제작 중임.
- 투먼시는 다음 달부터 호시(互市)무역을 시행키로 하는 등 북한과의 교역 확대에도 나섰다.
- 호시무역이란 변경 주민들이 통행증만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물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
- 오는 29일 개통되는 훈춘-라진항-상하이 해상 항로에 이어 청진항을 이용한 동해 뱃길까지 확보함에 따라 헤이룽장(黑龍江)과 지린(吉林) 등 중국 동북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곡물이 중국 남방지역이나 동북아시아 국가 등으로 진출할 길이 열리게 됨.
-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가로막힌 동북지역의 해상 항로 확보를 위해 북한 라진항과 청진항 사용권 확보에 공을 들여왔으며 2008년 다롄(大連)의 창리(創立)그룹이 라진항 1호 부두 사용권을 확보

● **北은행들, 해외 17개 은행에 37개 계좌 보유(7/23, 미국의 소리(VOA))**

- 북한 은행들이 중국 등 12개국 은행 17곳에 모두 37개의 계좌를 열어 놓고 있음.
- 방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일명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 “북한 은행들의 해외계좌는 중국과 유럽국가들에 집중돼 있다”며 이같이 말함.
- 국가별로는 중국은행(중양은행) 11개, 중국건설은행 5개, 홍콩 HS-BC은행 1개 등 절반 가까운 17개가 중국계 은행에 개설돼 있으며, 그밖에 러시아, 스위스,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 벨라루스 등 범유럽권 8개국의 9개 은행에 11개 계좌가 있고, 말레이시아와 카자흐스탄에도 1개씩 열려 있음.
- 북한의 은행별 해외계좌수는 ‘암록강 조선통일발전은행’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조선광선은행 9개, 동북아시아은행 4개, 고려상업은행이 3개임.



- 북한 동북아시아은행에 근무한 적이 있는 탈북자 김광진씨는 VOA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 등으로 북한 은행들의 해외계좌가 많이 감소한 것 같다”면서 “북한 은행의 해외계좌는 북한 정권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주된 통로여서, 미국이 다시 BDA식 제재를 실행할 때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또 “북한은 미국의 추가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개인 명이나 외국의 위장회사 명의로 계좌를 열어 금융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 기타 (대내 경제)

- 北 의학과학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감자살즙영양산유’를 어린이들 건강증진에이용(7/20, 중통)
- 北, 제25차 아시아국제우표전람회(2010, 방콕) 관련 새우표(소형전지 1종) 발행(7/20, 중통)
· ‘영리한 너구리’ 등 아동영화들의 인상적 장면을 보여주는 우표(묶음전지 1종)도 발행
- 黃北道 축산부문 일꾼 등, 올해 상반기 기간 동안 염소·토끼 수를 계획의 112.5%, 125.9%, 젖생산 115% 성과 보도(7/21, 중방)

다. 사회·문화

● 中서 펼친 北홍루몽 공연, 다론펬서 종영(7/19, 중국신문사)

- 북한 피바다가극단의 대형 가극 ‘홍루몽’이 18일 다론펬(大連) 공연을 마지막으로 2개월여에 걸친 중국 순회공연의 막을 내렸으며, 가극단은 다론펬 공연을 마친지 하루만인 19일 오전 국경도시 단둥(丹東)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감.
- 중국 원작을 가극화한 북한판 홍루몽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맞춰 지난 5월 6일 베이징에서 첫 선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후허하오터((呼和浩特)와 창샤(長沙), 우한(武漢), 푸저우(福州), 선전(深천<土+川>), 충칭(重慶), 시안(西安), 톈진(天津), 창춘(長春) 등 중국의 13개 도시를 순회, 30여차례 공연됨.
- 198명의 단원이 참가한 이번 중국 순회공연은 한국어로 진행됐으나 중국어 자막이 나오고 중국인들이 워낙 친숙한 소재여서 상당한 호응을 얻었고 배우들도 인기를 누렸다고 통신은 전함.

● 북·중 청소년축구대표팀, 평양서 두 차례 평가전(7/19, 조선중앙통신)

- 10월 중국 산둥(山東)성 쑤보(濰博)시에서 열리는 ‘2010 아시아축구연맹 청소년(U-19) 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북한 대표팀과 중국 대표팀이 평양에서 두 차례 평가전을 가졌음.
- 통신은 “이달 15일과 18일 평양 양각도 축구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렸는데 조선팀(북한팀)이 2대1, 6대2로 두 경기 다 이겼다”고 말하며,



중국팀은 지난 12일 북한 조선인민군 소속의 '만경봉팀'과도 경기를 가져 1대2로 패했다고 덧붙임.

● **北통신…FIFA 지원, 종합축구단 숙소 리모델링(7/19, 조선중앙통신)**

- 국제축구연맹(FIFA)의 지원을 받아 북한 '국가종합축구단' 숙소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음.
- 통신은 "FIFA의 '골 협조계획'(골 프로젝트)에 따라 조선 국가종합 축구단에 선수, 감독을 위한 숙소가 새로 꾸려졌는데, 연건평 2천 100㎡에 6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는 침실, 식당, 목욕탕, 수영장, 녹화 시시설 등을 갖췄다"면서 "오늘 준공식에 축구협회 위원장인 리룡남 무역상과 모하메드 빈 함맘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이 참석했다"고 말함.
- 김일성대학 교수를 지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명철 선임연구원은 "북한에서 국가종합축구단은 남녀, 연령대별 축구대표팀을 포괄하는 조직을 의미한다"고 말함.
- FIFA는 1999년부터 '골 프로젝트'를 시작해 가난한 나라의 축구 기간 시설 확충을 돕고 있으며, 북한에는 2001년 이후 155만 달러를 지원

● **北, MP3·DVD 반입금지…기관·프로그램도 교체(7/2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MP3, DVD·CD플레이어 등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
- 방송은 북한 량강도 대흥단군의 소식통을 인용, "지난 6일 라디오와 '녹화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당의 방침이 내려왔다"며 "보위부·보안부·체신성의 일꾼과 기술자로 구성된 '중앙당검열대'가 각 도에 파견돼 집중 검열을 벌이고 있다"고 말함.
- 북한에서 '녹화기'는 VCR, CD플레이어, DVD플레이어를 통칭하는 말
- 방송은 또 "이번 당 방침은 무역단위(무역조직)와 해외 방문자의 녹화기나 MP3 반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면서 "개인 소유의 외제 녹화기는 조종기관을 교체하고, 구형 녹음기와 MP3의 라디오 기능도 제거하도록 했다"고 말함.
- 함경북도 청진시 소식통은 이 방송에 "중앙당검열대'는 세관, 무역기관은 물론 개인 집까지 나와 등록되지 않은 녹화기나 MP3를 무조건 회수해 간다"면서 "아울러 인민반 단위로 주민회의를 열고 체신소와 컴퓨터 봉사소를 찾아가 개인이 보유한 DVD플레이어와 MP3를 빨리 개조하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전함.
- 여기서 MP3 등 전자기기의 개조는, '조종기관'과 프로그램을 북한 정보산업지도국에서 만든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외국에서 반입된 CD와 DVD를 재생하지 못한다고 방송은 설명



● 北…중앙통신 ‘집중호우’ 심야보도(7/23, 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중앙통신은 23일 0시30분 구체적 피해 상황은 언급하지 않은 채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에 전날 하루 최고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고 전함.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각각 23일 오전 6시와 7시, 전날 오후 평안북도의 운산군, 함경남도의 신흥군과 함흥시에서 불어난 강물로 고립됐던 주민 68명을 공군 ‘비행기’ 4대가 긴급 출동해 구조했다고 전함.
- 이들 방송은 “운산군에는 21일 0시부터 22일 오후 3시까지 39시간 동안 204mm가 왔는데 특히 22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79mm가 집중적으로 퍼부어 군 전체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면서 “갑자기 불어난 큰물(홍수)로 1천 정보 가까운 농경지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고 전함.
- 이들 매체에 따르면 북한에는 지난 16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강수량이 가장 많은 개성 인근 장풍군의 경우 16~19일 나흘간 332mm의 ‘물폭탄’이 쏟아졌음.

● 北에 여름 전염병 확산, 속수무책(7/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북한 전역에 전염병이 번지고 있지만 치료약이 크게 부족한데다 당국의 특별한 대책도 없어 피해가 늘고 있다고 전함.
- 방송은 북한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 “해마다 여름철이면 콜레라,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성홍열 같은 전염병이 돌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곤 했는데 최근에는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전염병까지 번지고 있다”면서 “청진, 무산, 부령 등에서는 악성 여름감기가 널리 퍼졌지만 별다른 대책 없어 가을이 와 수그러지지만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밝힘.
- 또 “북한 보건당국이 설사병 치료용 링거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만든 의약품의 신뢰도가 낮아 중국산이 장마당에서 불티나게 팔린다”면서 “‘손발을 깨끗이 씻고 식초를 많이 마시라’는 식의 예방법을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있기는 하나 의약품이 너무 부족해 설사병을 잡기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임.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7/16~19 사이 각 지역들에 집중豪雨 보도 (7/19, 중통)
- 조선기록영화촬영소, 기록영화 '주체철에 깃든 사랑과 믿음의 전설' 제작 (7/19, 중통)
- 北-中청년종합축구팀 경기, 7/15과 7/18 평양 양각도축구장에서 진행(7/19, 중통)
- 4.25예술영화촬영소, 7/20 예술영화 '햇빛 밝아라' 제1부 제작 및 시사회 진행(7/20, 중통)
 - 당과 군대, 국가 간부들,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등 감상
- 김정숙평양제사공장·평양방직공장 예술소조원들의 공연, 黨·政간부들 참석下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진행(7/21, 중통)
- 조선민속박물관에서 7/1부터 10월까지 가구유물전시회(합, 궤, 농, 장으로 구분되는 가구들과 서사가구, 소반 등 이조시기 대표적 유물 등) 진행 中(7/21, 중통)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8월초 5월1일경기장에서 개막예고(7/22, 평방)

2. 대외정세

● 유엔, 올 하반기 北에 500만 달러 구호기금(7/20,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 소리(VOA))

- 두 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지난 16일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엔 기구의 대북사업을 돕기 위해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에서 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
- OCHA의 스테파니 벵커 대변인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엔 기구에 긴급구호기금이 분배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아무래도 식량안보가 북한의 가장 긴급한 사안인 만큼 예년처럼 세계식량계획(WFP)에 가장 많이 배분될 것"이라고 RFA에 말함.
- VOA는 이와 관련, "OCHA를 통해 북한에 지원될 긴급구호기금이 올해에는 상반기 800만 달러, 하반기 500만 달러 해서 모두 1천300만 달러 정도 될 것 같다"면서 "이를 작년의 1천900만 달러(상반기 1천만달러, 하반기 900만 달러)와 비교하면 연간 지원액은 32%, 하반기 지원액은 45% 줄어든 것"이라고 밝힘.
- 벵커 대변인은 VOA에 "아프리카 사헬 지방의 식량난 등 다른 나라의 위기상황이 급박해지는 바람에 북한에 대한 지원액이 줄었다"고 설명
- VOA는 "올 상반기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모두 1천170만 달러로 작년 동기 2천4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쳤다"면서 "특히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4월 이후에는 개별 국가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임.

- 금년 하반기 OCHA는 총 4천100만 달러의 긴급구호기금을 북한 등 9개 나라에 지원할 예정인데, 북한은 차드·콩고(각 800만 달러), 예멘(700만 달러)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는 것임.
 - OCHA는 올 연말 북한에 대표단을 보내 지원된 기금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
- **北통신 “박의춘 외무상, ARF 참가 위해 출발”(7/20,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박의춘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대표단이 아세안지역연단(ARF) 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20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밝힘.
 - 또 “조선대표단은 이어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천년기(밀레니엄) 개발 목표 이행 검토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상급 특별회의에 참가하는 등 이번에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덧붙임.
- **북한 외무상, 27년만에 미얀마 방문(7/21, 미국의 소리(VOA))**
-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이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으로 단교했던 미얀마를 오는 29일 북한 외무상으로는 27년만에 처음 방문할 예정
 - 방송은 외신 보도를 인용, “박 외무상은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뒤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미얀마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박 외무상은 이번에 라오스와 인도네시아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 외무상이 미얀마를 방문하는 것은 27년만에 처음”이라고 밝힘.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박의춘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대표단이 아세안지역연단(ARF) 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으며,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으나 미얀마 방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음.
 - 북한과 미얀마는 단교 후 24년만인 2007년 외교관계를 회복했으며, 그후 북한이 미얀마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설 등이 나오고 있다고 VOA는 덧붙임.
 - 국교 회복 이듬해인 2008년 10월 미얀마의 니얀 윈 외무장관은 북한을 방문해 박의춘 외무상을 만난 바 있음.
- **北…美 추가제재는 유엔 성명 위반(7/22, 연합뉴스)**
- 북한은 22일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힘.
 - 북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대표단 대변인인 리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국제컨벤션센터(NCC)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전날 발표한 추가 대북제재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에 위반된다”고 밝히며,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는 속에서도 어제



남조선과 미국은 합동군사연습을 하겠다고 합의하고 발표했다”며 “이는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지적

- 그는 “안보리 의장성명은 서로 자제하고 평화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이러한 의장성명의 정신에도 위반된다”고 재차 강조
- 리 과장은 “6자회담은 우리가 이미 참가하고 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여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는 직접 혹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라는 천안함 의장성명의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말함.
- 또한, ‘미국이 대화를 제의하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동등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참가할 것이며 유관국들이 그러한 취지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유관국에는 미국도 포함돼 있다”고 답함.
- 리 과장은 “조선반도 비핵화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미국은 대화 분위기를 깨뜨리는 군사훈련과 제재를 하기 전에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대화해야 결실이 나올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이날 오전 박의춘 외무상과 양제츠 외교부장과 회담에 언급, “조·중 친선관계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라며 “전통적인 친선관계는 최고위급 왕래를 비롯해 오늘과 같은 외교부장급 접촉을 통해 보다 더 강화 발전되고 있다”고 말함.

● 北, ‘美 군사조치에 물리적 대응할 것’(7/23, 연합뉴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하고 있는 북한 대표단의 대변인 격인 리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이날 오후 베트남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기자들과 도어스텝(약식 기자회견)에서 “많은 공격무기를 장착한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한 이상 한미연합훈련은 더 이상 방어훈련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군사조치에 대해 물리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리 과장은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대한 또 하나의 적대 행위로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이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힘.
- 그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 ARF 회의에서 한국이 “사죄를 운운하며 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한 뒤 “천안함 사건은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고 말함.
- 리 과장은 “안보리 의장성명에서도 북한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에 유의한다는 요점이 있고 앞으로 직접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며 “북한은 이에 대해 평등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나가 평화협정 문제,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를 다룰 것임을 엄정히 천명했다”고 말함.



- 그는 또 이날 ARF 회의에 언급, “최근 조선반도 정세 악화는 60년째 존재해 온 정전협정 체제의 위험성을 실증해 왔고 평화협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줬다”며 “오늘 ARF에서 박의춘 외무상은 조선반도 평화보장과 관련한 이 같은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함.

● 北…러시아, ‘천안함조사’ 투명성 의문제기(7/24, 연합뉴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한 북한 소식통은 24일(현지시간)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대표단이 우리측에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면서 “진상을 공개하게 되면 ‘남조선과 미국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러시아 측이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줬느냐’는 질문에 “공식 통보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뒤 “러시아 측은 민군 합동 조사단이 참여한 외국 조사관들의 실체나 투명성도 의문시 된다고 했다”고 전함.
- 그는 또 천안함 사태의 후속 대응으로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에 대해 “중국도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면서 “우리 측 군부도 어떻게 나올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함.

● 北, ‘美 제재에 물리적 조치로 대응’(7/24,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와 관련해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얼마 전에 진행된 미국-남조선 ‘외교 국방장관 회담’이라는 데서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규모 전쟁연습과 추가적인 제재를 강행한다는 것을 공식 발표했다”며 “미국의 도발책동은 우리가 정한 금지선을 넘어서는 것이며 이런 조건에서 우리도 미국이 그어놓은 금지선에 더 이상 구애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주장
- 그는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역하고 군사적 도발과 제재압박으로 나오기로 한 이상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핵억제력을 더욱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대응할 것”이라며 “그 후과에 대한 대가는 전적으로 미국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
-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조(북)·미회담과 6자회담을 비롯한 모든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국제사회앞에 자기가 한 공약을 다 뒤집어 엮었으며 전쟁연습 강행과 제재를 통한 압박강화로 나오고 있다”며 “미국이 칼을 내밀면 칼을 내대는 것이 우리의 대응방식이다. 우리는 대화와 전쟁에 다 준비되어 있다”고 호언함.



- **北박의춘 ARF서 북한 경제발전 성과 상황소개(7/24, 연합뉴스)**
 -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이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 천안함 사태로 북한 인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짐.
 -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박의춘 외무상은 전날 ARF에서 “지난 몇 달 간 전쟁 직전의 폭발적인 조선반도 정세가 공화국(북한)의 안정과 인민에 피해를 줬고 경제에 극심한 손해를 가져왔다”고 밝힘.
 - 박 외무상은 또 발언의 시작부터 북한의 경제발전 성과를 소개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짐.
 - 그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2012년)을 맞아 강성대국 달성을 인민에 선포함에 따라 지난해 강철, 기계공업 등을 비롯한 인민 경제에 기적적 성과를 거뒀고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금년에는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 경제 발전에 총력적 힘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
 - 박 외무상은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 현장지도를 다녔고 국제적 투자와 관광업 확장, 경제개발 확대 등 중대한 정책을 확정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정세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
 - 그는 이어 “남조선 당국은 군부의 일방적 조사결과만 있는, 그래서 남조선 내부에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천안함 사건을 들고 나와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

■ 기타 (대외 일반)

- 미국이 “조선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나온다면 평화협정 체결은 문제로 되지 않으며, 비핵화과정도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이라고 ‘평화협정체결’ 持續 주장(7/19, 중통·노동신문)
- 일본의 제22차 국회 참의원 선거결과 與小野大(44:51) 정치현실은 “정국이 풍파와 곡절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상(7/19, 중방)
- 北-러 공동선언 발표(2000/7/19) 10돌 즈음 사진전시회 및 영화상 영주간 개막식, 7/19 김정숙(대외문화연락 위원장) 및 駐北 러시아 임시대리 대사 등 참가下 대동문영화관에서 진행(7/19, 중통)
- 北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日 아사히신문의 ‘北붕괴설 연재기사’를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보려는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정치적 도발행위에 대해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7/20, 중통)
-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조선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억제력’으로 밝힌 외교문서 공개 관련 “조선반도 지배를 통하여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려는 美·日의 더러운 흥정놀음”이라고 비난(7/20, 중통·노동신문·평방)
- 김영남, 7/19 벨기에 국경절 즈음 同國 국왕에게 축전(7/20, 중통·중방)
- 김영남, 콜롬비아 독립 200주년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7/20, 중통·중방)



- 駐北 이집트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이집트의 7월 23일 혁명 58돌 즈음), 서호원(北-이집트친선협회 부위원장) 등 참가下 평양 방직공장에서 진행(7/22, 중통)
- 김영남, 이집트의 민족적 명절인 7월23일 혁명 58돌 즈음 대통령에게 축전(7/22, 중통)

3. 대남정세

- 北신문 “한·미 해상연합훈련, 엄중한 도발”(7/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달 하순 동해상에서 진행될 한미 해상연합훈련에 대해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신문은 논평에서 “최신예 전투기 80대를 탑재하고 1천km의 작전반경을 가진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투입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상연합훈련의 위험성이 드러난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훈련 강행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에 미칠 파괴적인 후과를 심사숙고해 전쟁연습 계획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
- 北 최태복 의장 “한반도, 전쟁 접경 치달아”(7/20, 연합뉴스)
 -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20일(현지시간) “평화와 민족통일을 바라는 대다수 민족의 열망과 달리 한반도 상황은 전쟁의 접경으로 치달고 있다”고 주장
 - 최 의장은 이날 낮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연설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올해 3월 남한의 군함인 천안함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에 침몰했을 때 남한 정부는 억지로 이 사건을 북한과 연계시키려 시도했다”며 “그 결과 한반도에는 전쟁의 불구름이 드리워졌다”고 말함.
 - 최 의장은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미국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
 - 그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4월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불사용 대상국가에서 제외한 것을 거론하며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위협정책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힘.
 - 또한, 그는 “미국과 남한 보수세력이 히틀러에 의해 저질러진 ‘의사당 방화사건(Reichstagbrand)’을 연상시키는 적대적 모략사건을 연출해 우리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위협하는 것을 추호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
 - ‘의사당 방화사건’은 1933년 바이마르공화국 총선 직전 의사당에 불이 나자 당시 연립내각 총리였던 아돌프 히틀러 세력이 사건 직후부



터 공산당을 범인으로 지목해 공안 분위기를 조성,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어 비상사태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나치가 전권을 쥐는 계기가 된 사건

- 북한은 지난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군사논평원 글을 통해 천안함 사건 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의사당 방화사건’ 등 역사적 사례들을 들며 “천안함 침몰 북 관련설은 날조”라고 주장한바 있음.
- 최 의장은 이날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은 부시 행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받아들이고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함.
- 최 의장은 연설이 끝난 뒤 실무자의 안내를 받아 지체 없이 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연설을 경청한 박희태 국회의장이 주차장까지 따라나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외면

● 北, 임진강 댐 방류계획 추가 통보(7/22,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8일에 이어 22일 다시 임진강 상류 댐의 방류계획을 우리 측에 통보
- 통일부는 “북측이 경의선 군 통신선을 통해 ‘7월22일 오전 6시부터 임진강 상류에 있는 댐들의 방류가 예상된다’는 내용을 통보해왔다”고 밝힘.
- 북측은 방류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은 오전 6시 40분께 ‘북측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우리 측 ‘남측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앞으로 통지문을 보냄.
- 통일부는 이에 따라 북측의 댐 방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강홍수통제소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 연천군 등 관련 기관에 북측의 통보 내용을 전파
- 북측은 앞서 지난 18일에도 경의선 군 통신선을 통해 ‘지금과 같이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저녁 8시 이후 임진강 상류 댐의 물을 불가피하게 방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왔으며, 북측은 당시 댐을 실제 방류한 것으로 관측됨.

● 北 또 팩스공세…‘7.28 재보선 심판’ 주장(7/23, 연합뉴스)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우리 측 모 종교단체에 7.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팩스는 북측 종교단체 명의로 중국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알려짐.
- 북측은 팩스에서 최근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한국진보연대 수사를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가 진보세력을 탄압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도 ‘날조극’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짐.



적인 군사적 도발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조건에서 그에 대응한 전면적인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응당한 선택”이라고 주장

- 또 연합훈련 등을 “사상 최대규모의 핵전쟁연습소동”이라고 규정하고 “미제가 핵을 휘두르고 괴뢰들이 거기에 추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핵억제력은 자위의 궤도를 따라 비상한 속도로 강화될 것이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더욱더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
- 이와 함께 “이러한 군사적 도발은 ‘천안’호 사건의 ‘북 관련설’을 부정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평화적으로 완화시킬 것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의 의사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천안’호 사건을 계속 우리와 억지로 연계시키고 있는 조건에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 위한 모든 조치를 끝까지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성명은 덧붙임.

■ 기타 (대남)

- 연내 패트리엇미사일부대 배치계획 추진 관련 “北을 겨냥한 상전의 미사일 방위체계에 정식 가입하려 한다”며 “외세와 야합하여 제2의 조선전쟁 도발에로 미친 듯 질주하고 있다”고 비난(7/20, 평방)
- 北 「민화협」 대변인 담화, 한국진보연대 등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파쇼적 폭거, 탄압소동이 감행되고 있다”고 선동 발표(7/21, 중통)
-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단 발표 관련 “날조극, 모략극”이라며 “검열단 및 공동조사 수용” 持續 주장(7/21, 평방)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ARF 의장성명 ‘북한’ 명시 회피” <日언론>(7/25)

- 일본 언론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공격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음.
- 요미우리신문은 25일, 진통끝에 ARF 의장 성명이 24일 밤 발표됐지만 한국, 미국, 일본과 북한이 격렬하게 대립한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하는데 그쳤으며 공격의 주체로 ‘북한’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노렸던 북한에 대한 포위망 구축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평가했음. 마이니치신문도 ARF 의장 성명이 “한국의 천안함 침몰이 공격에 의해 일어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북한을 명시해 비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이 신문은 베트남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성’을 성명에 포함하도록 요구했으나 ‘유엔안보리의 관련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표현에 머물렀다고 보도했음. NHK방송 역시 밤늦게 발표된 ARF 의장 성명은 최대 초점인 한국의 천안함 침몰에 대해 ‘공격에 의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북한을 명확하게 비난하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이 삭제를 요구한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우려’를 명기함으로써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걱정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응했다고 보도했음. 이 신문은 베트남이 주도한 ARF 의장성명 문안조정에서 북한은 ‘초계함 침몰 사건’이라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말고 ‘한반도의 정세악화’ 등 추상적 표현을 하도록 요구했으나 한국의 반발을 의식해 ‘초계함 침몰’이라는 문구를 넣되 다른 표현은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러 전문가들, 천안함 ‘결정적’ 답변 못낸 상태”(7/25)

- 러시아 군 당국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조사 자료와 관련 증거를 살펴본 뒤 귀국한 러시아 전문가들이 아직 어떠한 결정적인 답변들도 제시할 수 없는 상태라고 24일(현지시각) 밝혔다. 블라디미르 비소트스키 러시아 해군사령관은 이날 러시아 라디오방송 ‘에코 모스키비’에 “우리는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들에



대해 여전히 의문들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러시아 뉴스 통신 리아 노보스티가 전했다.

- 그는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나올지를 묻는 질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다”고 답했음. 해군의 잠수함·어뢰 전문가 등 4명으로 구성된 러시아 조사단은 5월 31일 한국에 도착해 합동조사단의 조사 자료와 관련 증거를 살펴본 뒤 6월7일 귀국했음.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의장성명 채택 직후인 16일 “안보리의 결정은 균형이 잘 맞고 국제 사회의 합의된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누구도 이런 평가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뒤틀어선 안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음. 그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황을 진정시키고, 동요나 감정의 격화를 피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들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 “러시아, ‘천안함조사’ 투명성 의문제기”(7/24)

- 러시아가 한국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와 관련해 투명성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RF에 참가한 북한 소식통은 24일(현지시간)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대표단이 우리측에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면서 “진상을 공개하게 되면 ‘남조선과 미국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 이 소식통은 ‘러시아 측이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줬느냐’는 질문에 “공식 통보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뒤 “러시아 측은 민군 합동조사단이 참여한 외국 조사관들의 실체나 투명성도 의문시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천안함 사태의 후속 대응으로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에 대해 “중국도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면서 “우리 측 군부도 어떻게 나올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ARF ‘천안함’ 격돌..한·미·북·중 참여대립(7/23)

- 베트남 하노이에서 23일 개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미·중이 정면 격돌했음. 한·미 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고 6자회담에 앞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하자 북한은 즉석에서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고, 중국은 6자회담 조기 개최를 통한 국면전환을 주장했다.
- 이날 오전 하노이 국제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ARF 외교장관 회의의 리트리트(Retreat:자유토론)에서 우리측 대표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에 대해 “천안함 도발행위를 명확하고 진실되게 시인하고 사과하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도발행위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북한은



국제사회의 촉구를 무시하고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 도발과 위협을 계속할 수 있다”면서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그러려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실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고립되고 호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북한이 현재 이웃국가들에 대한 위협과 공격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이룬다면 역내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음. 이에 대해 북한 박의춘 외무상은 우리측의 사과요구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천안함 문제는 아직까지 완전히 규명된 것이 아니며 진상을 객관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검열단 파견을 요청했지만 한·미 양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박 외무상은 특히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경제발전을 이룩해가고 있는 시기에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정세가 도래했다”고 비난했음. 박 외무상은 이어 6자회담 문제를 거론, “(제재의 모자를 쓰지 않은)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전체제라는 냉전시대의 유물이 아직 잔재하고 있으며 이를 조속히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음.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은 “천안함 문제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된 만큼 이제 페이지를 넘겨야 한다”며 국면전환을 주장하고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음.
- 4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의 상당수가 천안함과 북핵문제를 거론했으며 대부분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의 내용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고 당국자가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북·미는 각각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함 문제와 북핵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치열한 장외(場外) 공방을 전개했음.
- 북한 대표단의 대변인 격인 리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도어스텝(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많은 공격무기를 장착한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한 이상 한미연합훈련은 더 이상 방어훈련이 아니며 북한에 대한 또 하나의 적대 행위로서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미국의 군사조치에 대해 물리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천안함과 관련, “(한국이) 사죄를 운운하며 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한 뒤 “천안함 사건은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고 강변했음.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ARF에서 참가국 대표들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완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촉구했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음. 클린턴 장관은 이어 “북한에 대한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북한이 5년전 비가역적(irreversible) 비핵화 약속을 지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면 우리는 기꺼이 북한과 대화하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의장국인 베트남은 이날 오전부터 의장성명 초안을 회람시킨 뒤 최종 문안을 놓고 남·북한을 상대로 막판 조율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날 저녁 또는 24일 오전 의장성명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 클린턴 “北, 완전한 비핵화시 관계정상화”(7/23)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북한이 5년전 비가역적(irreversible) 비핵화 약속을 지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면 대화와 협의를 통해 관계 정상화로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클린턴 장관은 이날 오후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대한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미 군사훈련과 ‘2+2(외교·국방장관)회의’를 통해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지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의 지도자가 위협적인 도발에 대해 덜 생각하고 주민들을 더 걱정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얼마든지 북한의 주민들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ARF에 언급, “참가국 대표들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완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촉구했다”면서 “북한도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천안함 침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북한의 도발을 비난했다”면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기술(nuclear know-how)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6자’ 외교장관 베트남 ARF 집결>(7/22)

-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의 외교수장이 한자리에 모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가를 위해 22일 오후 현지에 도착하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끝으로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들이 베트남 하노이에 집결하는 것임. 이미 현지에 도착해있는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분주한 일정을 하고있음.
- 가장 먼저 현지에 도착한 양 부장은 전날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데 이어 이날도 활발한 양자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음. 특히 이날 오전에 북한의 박 외무상과 만났음.
-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이 결의된 상황에서 북·중 양국의 대응이 관심을 끄. 박 외무상과의 협의를 마친 양 부장은 이날 오후 또는 23일 오전 중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 천안함 사건과 한미 연합훈련 등으로 치열한 기싸움을 한 미국과 중국이 어떤 대화를 나눌 지 주목됨. 북한의 반응도 관전포인트임. 한미 양국의 강력한 대북 경고메시지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향후 국면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임. 전날 도착한 북한의 박 외무상도 이날 오전 중국뿐만 아니라 태국, 오후에는 말레이시아와 양자회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외무상은 이날 오전 숙소 식당에서 만난 기자들에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등 전날부터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음.
- 그러나 박 외무상은 중국 등과 양자회담에서는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에 쏠린 비난 또는 의혹의 시선을 돌리고자 천안함 사태와 북한은 무관하다는 점과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23일 ARF 폐막 전후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란 게 대체적인 예상임. 이날 오후 현지에 도착하는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ARF 무대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도 주요 관심사임.
- 지난해 ARF에서도 기자회견을 자청,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했음. 이 밖에 유 장관과 전날 도착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일본 등과 양자회담을 여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中, 美의 대북 고강도제재 예의주시>(7/22)

-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돈줄죄기를 포함해 고강도의 대북 추가제재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중국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중국은 애초 천안함 사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을 도출한 것을 계기로 천안함 국면을 북핵 6자회담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비쳐왔음.
- 그러나 한국과 미국 양국이 동·서해 군사훈련의 규모를 확대한데 이어 이번에는 대북 금융제재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천안함 ‘압박’을 지속하자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도 엿보임. 중국 정부는 미 행정부의 대북 추가제재 방침에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음.
- 그럼에도 21일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동·서해 합동 군사훈련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데 대해서는 같은 날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서해) 및 기타 중국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중국은 미국이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를 서해 합동군사훈련에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그래도 이번 훈련이 북한만이 아닌 중국에 대한 압박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음.
- 이런 분위기는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22일자 영문판에서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은 동북아 지배를



강화하고 이해관계를 관철하기위해 황해를 ‘협상카드’로 쓰고 있다”고 언급한데서도 잘 드러남. 여기에는 미국이 서해에 항모를 투입할 경우 베이징(北京)과 동북3성의 핵심적인 안보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중국과 직접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피하면서도 동·서해에서 훈련 규모와 강도를 확대해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 다른 뉘를 얻어내려 한다는 인식이 배어있음.

- 중국이 동·서해 한미 합동군사훈련보다 더 긴장하는 대목은 미 당국이 한미 외교·국방회담을 계기로 밝힌 “북한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돈을 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 구상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임. 미 당국이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기업을 단죄하고 그와 관련된 외국 기업과 은행을 사정권에 두게 되면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에 유탄이 날아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
- 중국은 아직 서방 기준의 투명한 금융거래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탓에 미 행정부가 북한의 부적절한 금융거래를 철저히 금지하게 되면서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미 당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임. 미 행정부는 재래식 무기나 마약, 위폐, 가짜 담배 밀매 등 불법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북한 정권유지 및 WMD 개발의 자금원이 돼 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에 이런 불법활동을 발본색원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한을 수행중인 미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21일 불법활동을 하는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을 미국 금융기관들과 단절시키겠다고 밝혔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클린턴 국무장관이 방한 기자회견에서 과거 사례를 거론하면서 북한에 대한 고강도 금융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미 행정부가 지난 2005년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금융제재를 다시 꺼내들 것으로 추론하고 있음.
- ‘BDA식 금융제재’는 미 재무부가 2005년 9월 15일 애국법 311조에 따라 마카오 소재 은행인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그 곳에 예치된 북한 예금 2천500만 달러를 동결한 조치를 일컫음. 당시 미 재무부는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해 미국내 금융기관들은 BDA와 거래를 중단했고, 아울러 미 금융기관과 거래에 불필요한 장애를 우려한 전 세계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BDA와 거래를 기피했고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마카오 당국이 나서서 북한 자금을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했음. 일각에서는 당시 BDA가 마카오에서 6,7위권의 소형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관련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해당 금융기관이 중국내 유력 금융기관이었다면 일대 금융혼란이 생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었음.
- 다시 말해 BDA 사건은 국제금융시스템에서 미국을 통하지 않고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점을 확인시킨 것으로, 중국의 금융기관이 다시 연루된다면 중국으로서도 적잖은 파장이 생길 것으로 보임. 미



행정부는 일단 구체적인 대북 추가제재의 범주를 정한 뒤 북한과의 불법 거래가 있는 국가들과 ‘협약’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중국은 일단 향후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한 뒤 입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이번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클린턴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간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어 이를 계기로 미 행정부의 대북 추가제재안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 “北, 남한 직접공격 시대 진입한 듯”(7/21)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는 20일 북한이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남한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위험한 시대’에 진입했을 수 있다고 밝혔음.
- 클래퍼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올해 북한의 도발 행위(천안함 공격)로부터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북한이 대내외적인 정치적 목적을 진전시키기 위해 다시금 한국에 대해 직접공격을 가하는 위험하고도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말했음.
- 또 클래퍼 지명자는 “이와 더불어 북한의 군사력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위협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재삼 깨닫게 됐다”고 말했음. 그의 이런 발언은 아직까지 지명자 신분이지는 하지만 16개 기관을 관장하는 DNI를 대표해 북한의 천안함 도발 배경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됨. 특히 클래퍼 지명자는 지금까지 국방부의 정보담당 차관을 맡아왔으며, 1980년 중반 주한미군과 태평양사령부, 전략공군사령부를 관할하는 정보담당 국장을 맡아 한반도 사정에 밝다는 점에서 이번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지적임. 클래퍼 지명자는 1980년대 당시 북한문제를 다뤘던 경험을 토대로 “이번 천안함 사건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기도 미수 사건은 승객 115명의 목숨을 앗아간 1987년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발 사건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음.
- 이런 맥락에서 클래퍼 지명자의 분석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 혹은 핵실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왔던 최근 수 년간의 행태와는 달리 남한을 직접 공격, 한반도의 긴장조성을 통해 향후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키우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됨. 클래퍼 지명자는 지난 5월 물러난 데니스 블레어 전 DNI 국장의 뒤를 이어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새 국장후보로 지명을 받았음.
-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DNI가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중앙정보국(CIA)과의 주도권 싸움에 밀려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타개할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클래퍼 지명자에게 집중 추궁했음. 클래퍼 지명자가 상원인준을 통과하게 되면 존 네그로폰테, 마이클 매크넬, 데니스 블레어에 이어 4번째 DNI 수장이 됨.



나. 미·북 관계

● “연합훈련 美항모, 대북 압력 증강” <AP>(7/25)

-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이 25일 시작한 연합훈련을 주요기사로 신속 보도했음. AP통신은 “(이번 훈련에 참가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음.
- AP는 천안함 사건 4개월 만에 일종의 무력시위로 보일 수 있는 이번 작전에서 거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작전을 시작했다면서 핵 억제력을 사용하겠다는 북한의 구호는 오폭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북측의 반응으로 미뤄볼 때 한반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음. AFP통신도 북한의 핵위협에도 한국과 미국이 해상 연합훈련을 시작했다고 이날 보도했음. AFP는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작전은 북한에 공격적인 행동을 중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련의 조치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규정했음.
- 미국 CNN 방송은 이번 훈련이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과 미국 양국이 주요 해상 훈련에 돌입했다고 보도하면서, 양국 안보라인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훈련은 서해와 육상에서 향후 진행될 일련의 연합훈련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한미훈련에 강력히 반대해온 중국의 언론들은 이번 연합훈련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음.
- 관영 신화통신은 한·미 양국이 주변국들의 우려 속에서 동해 상에서 대규모 연합 훈련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음. 이어 많은 전문가가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과 20여척의 군함과 잠수함, 200여기의 항공기를 동원한 이번 훈련은 한반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 가까운 장래에 대화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 다른 중국 언론들도 이번 훈련이 34년 만에 최대 연합훈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훈련에 참가하는 군함과 전투기 등 규모와 전력을 상세하게 소개했음. 중국 언론은 또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할 계획이라면서 큰 관심을 보였음.
- 홍콩의 명보(明報)는 미국은 이번 한미 연합훈련의 목적을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서해(중국명 황해)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야심을 억누르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해 나흘간 일정으로 연합훈련을 25일 시작했다.
- ‘불굴의 의지’로 명명돼 동해 전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해 아시아 최대수송함인 독도함(1만4천t급),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F-22 전투기 4대, F/A-18E/F(슈퍼호넷) 등도 참가함. 훈련 참가 병력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8천여명에 달함.



● “美 행정명령으로 대북 금융제재 추진”(7/25)

- 정부 고위당국자는 25일 미국의 추가 대북금융 제재와 관련, ‘미국이 행정명령이라는 국내법적 근거를 만들어 포괄적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무기와 사치품, 마약·가짜 담배·위폐 등 불법행위 등 세가지 범주에서 대북 금융제재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 이는 미국 재무부가 2005년 9월 애국법 311조를 적용했던 ‘BDA식 금융제재’ 방식이 아니라 행정명령 형식의 새로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금융제재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됨. 이 당국자는 “미국이 현재 검토 중인 행정명령은 대북제재 결의안인 1874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국내법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국이 1874호를 근거로 국제적 대북제재를 추진하려면 국내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미국은 현재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북한의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3개 북한 기관 및 기업과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을 제재대상으로 지정 중이며 이를 새롭게 강화·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아인혼 대북제재 조정관은 다음달초 한국을 방문, 우리 정부와 행정명령 제정을 포함한 대북 금융제재 추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방한을 전후해 일본, 중국, 동남아 국가들을 순방할 것임.
- 이는 미국이 본격적인 대북 금융제재에 앞서 보다 촘촘한 제재 그물망을 구축하기 위해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주요 정보를 수집하고 금융거래 차단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됨. 이 당국자는 “동남아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 그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캐나다도 조만간 양자제재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며 “제재조치를 하기 전에 우리 정부와 사전조율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제재에 관련, “북한이 1년에 10억 달러 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미국이 불법 금융거래를 통제하고 일본이 조총련 돈 송금을 차단하고 있는데다 우리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어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음.
- 그는 이날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연말까지 매달 실시될 것”이라며 ‘특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는 더욱 경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6자회담 재개주장을 펴고 있는데 대해 “북한이 별안간 6자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천안함 국면을 6자회담 국면으로 돌리겠다는 의도이며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음.
- 이 당국자는 이어 “지금은 출구전략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6자회담이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의 진정성을 보고



회담을 열자는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비핵화 의지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음. 이 당국자는 천안함 후속대응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안정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입장”이라며 “크게 볼 때 북한 소프트랜딩(연착륙) 전략은 우리 정부와 중국, 러시아가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이어 “북한 때문에 한·중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떻게 북한을 관리할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 “美, 北 거래기업 블랙리스트 공시 추진”(7/24)

- 미국이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로 북한과 거래 의혹이 있는 기업을 블랙리스트로 관보에 공시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음. 신문은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량과피 무기나 사치품 거래에 참여한 의혹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이름을 관보에 공시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이들의 계좌를 동결, 폐쇄토록 하는 방안을 한국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 미국 재무부는 2005년 9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북한의 자금세탁 의혹이 강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이 은행이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마카오 정부의 관리하에 들어갔었음. 미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금융기관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이름을 블랙리스트로 공시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임.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해당 정부나 금융기관이 (대북 제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신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이름 공시가)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하지만 북한과 관련 있는 계좌는 중국 내에 가장 많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협력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느냐가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제재 실효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공시 방안’과 관련, “(미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행정조치이므로 당연히 관보에 게재해야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러한 방식은 북한 기업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BDA방식의 조치와는 각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 北 “美 군사조치에 물리적 대응할 것”(7/23)

- 북한 외무성의 리동일 군축과장은 23일 “미국의 군사조치에 대해 물리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가하고 있는 북한 대표단의 대변인 격인 리 과장은 이날 오후 베트남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기자들과 도어스텝(약식 기



사회견)에서 “많은 공격무기를 장착한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한 이상 한미연합훈련은 더 이상 방어훈련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 리 과장은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대한 또 하나의 적대 행위로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이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 그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 ARF 회의에서 한국이 “사죄를 운운하며 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한 뒤 “천안함 사건은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고 말했다.
- 그는 “이는 북남 사이에 반드시 규명돼야 할 문제로 만약 결과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꾸며낸 조사결과 뿐”이라고 주장한 뒤 “오늘 회의에서 외무상이 조사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리 과장은 “안보리 의장성명에서도 북한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에 유의한다는 요점이 있고 앞으로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며 “북한은 이에 대해 평등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나가 평화협정 문제, 조선반도 비핵화 문제를 다룰 것임을 엄정히 천명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이날 ARF 회의에 언급, “최근 조선반도 정세 악화는 60년째 존재해 온 정전협정 체제의 위험성을 실증해 줬고 평화협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증명해줬다”며 “오늘 ARF에서 박의춘 외무상은 조선반도 평화보장과 관련한 이 같은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 北 “美 추가제재는 유엔 성명 위반”(7/22)

- 북한은 22일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대표단 대변인인 리동일 외무성 군축과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국제컨벤션센터(NCC)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전날 발표한 추가 대북제재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 리 과장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는 속에서도 어제 남조선과 미국은 합동군사연습을 하겠다고 합의하고 발표했다”며 “이는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리 의장성명은 서로 자제하고 평화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이러한 의장성명의 정신에도 위반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리 과장은 “6자회담은 우리가 이미 참가하고 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여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는 직접 혹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라는 천안함 의장성명의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 그는 ‘미국이 대화를 제의하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동등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참가할 것이며 유관국들이 그러한 취지에서 모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요국 정부들과 공조해 이들 국가 내에서 불법적인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들을 적발하고, 해당국 내 은행들이 이들 무역회사의 금융거래를 도와주는 일을 방지하는 새로운 노력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은 이름과 활동 근거지를 수시로 바꾸며 지속적으로 불법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무역회사를 가장한 북한 기관들의 활동을 막기 위한 고강도 처방도 예고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수행중인 미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불법활동을 하는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을 미국 금융기관들과 단절시키겠다고 밝혔다.
- 지난 2005년 미국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결과적으로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 2천500만달러를 동결하고, 외국금융기관의 북한과의 거래를 막은 것과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임.
- 미국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 제3국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불법적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BDA식 제재 카드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비치면서 협력을 유도할 것으로 보임.
-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국제금융시스템 상 미국을 통하지 않고는 국제금융 거래가 불가능하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대북 금융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음.
- 미국 정부가 이날 밝힌 추가 대북제재의 범주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 기관과 개인들에 대한 미 국무부와 재무를 통한 제재대상 추가 지정 및 자산 동결 ▲해외 불법활동 북 무역회사 운영 중단 및 금융거래 차단 ▲확산과 관련된 북한 핵심인물들의 여행금지 확대 ▲외교관 특권을 이용한 마약밀매 등 불법거래 감시 강화 ▲북한에 대한 사치품 등 금지품목 판매나 북한으로부터의 재래식무기 등 금지품목 구매 금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확대 등 5가지임.
-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방안은 대북제재 조정관을 겸하고 있는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의 8월 초 한국 등 관련국 방문을 전후해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임. 2+2(외교·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한국과의 조율을 마친 미국은 이번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클린턴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중국과도 조율을 벌일 예정임.

● 美 “2주내 패키지 제재조치 단행”(7/22)

- 미국 국무부는 21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의 돈줄이 되고 있는 각종 불법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2주내에 패키지 제재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서울체류중 공개한 대북제재 내용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는 북한의 비확산(차단)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무기프



로그래에 자금을 공급하는 불법활동에 대해 공격을 가하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크롤리 차관보는 “국무부가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수 개월간 연구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행정명령 도입 등 내부적인 법적 준비절차를 거쳐 2주일내에 제재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이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불법활동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위폐제작, 가짜담배 제조, 외교관의 특권을 이용한 밀수행위 등을 예로 들었음.

- 이에 맞춰 대북제재 조정관을 겸하고 있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8월 초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국들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크롤리 차관보는 설명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주요국 정부들과 공조해 이들 국가내에서 불법적인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들을 적발하고, 해당국내 은행들이 이들 무역회사의 금융거래를 도와주는 일을 방지하는 새로운 노력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북한 기업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내 정부들과 손을 잡고 북한의 불법활동 및 획득하는 자금의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아인혼 조정관의 방문지에는 동남아 일원의 국가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 또 크롤리 차관보는 확산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물론 이와 연관된 자산동결 지정대상을 이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협의를 거쳐 지목해 냈다고 밝히고,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여러나라에 꼭두각시 회사를 차리는 등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왔던 조치에 ‘적응’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새로운 제재조치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그러나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불안정을 조장하고 불법적이며,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만일 북한이 국제적 의무사항을 준수한다면 제재의 필요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美, 北조선광업개발무역 제재 부과(7/21)

- 미국 국무부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 법안’에 의거, 북한의 조선 광업개발무역(KOMID)을 제재대상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신규 제재대상 리스트에 따르면 조선 광업 개발무역은 지난 7월 14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제재대상 명단에 올랐음. 조선 광업 개발무역은 지난 2006년 이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을 어기고 대량살상무기(WMD) 혹은 탄도미사일 시스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 앞으로 조선광업개발무역은 미국 행정부의 어느 부처와도 정부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미국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없음. 이번 제재는 발효시점부터 2년간 유효함. 조선광업개발무역은 탄도미사일 수출 거래를 해온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된 바 있음.

● 美 “北, 긴장감소 조치 취해야”(7/21)

- 미국은 20일 한반도 긴장감소를 위해 북한이 취해야만 하는 조치가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레브리핑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DMZ(비무장지대) 방문 계획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필요가 있고 취해야만 하는 분명한 일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DMZ는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중단됐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라면서 DMZ가 한반도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심벌이라고 지적했음. 그는 이어 클린턴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DMZ방문은 한국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민과의 강력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자 한국 및 역내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필요한 일들을 하겠다는 결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음.
- 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이에)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가 한국 방어를 전적으로 공약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이해하기를 바라며, 긴장 감소 및 이웃과의 관계 개선, 도발적 행동 중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좀 더 건설적인 역할 등의 조치들을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또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 여부에 대해 “북한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북한에 추가적인 압력을 넣는 방법들을 항상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검토중인 특정한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견하지 않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음.
- 그는 한국 등과의 긴밀한 조율 방침을 밝히면서 “특정한 조치나 새로운 제재에 대한 특정한 발표를 예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미간의 접촉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계획된 것은 여전히 없다”고 확인한 뒤 이번 ARF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가 중요한 논의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한미, 해상·공중·수중 입체적 연합훈련>(7/20)

-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동해상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은 ‘불굴의 의지’라는 작전명으로 공중과 해상, 수중에서의 입체훈련으로 진행됨.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의 잠수함(정) 위협에 대응하고 공중과 해상, 수중에서의 방어태세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이 한·미 군당국의 설명임. 특히 미국은 1976년 8월 판문점 도



끼 만행사건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공중-해상전력을 연합 훈련에 투입함으로써 유사시 미국의 충분한 군사적 지원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번 훈련의 가장 큰 특징임.

- ◇ ‘공중-F-22, 해상-함모, 수중-핵잠수함’ 입체훈련 =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기지에 배치된 세계 최강 F-22 전투기가 이번 훈련에 참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최초로 임무를 수행하게 됨. 작전반경 700km, 항속거리 3천km에 이르는 F-22기는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 있으며 이륙 후 30분 이내에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고, 1시간 이내에 북한 전 지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한 전투기임.
- 합참의 한 관계자는 “이번 훈련에 F-22를 참가시키기로 한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는 F-22를 포함한 미 해군과 해병대의 F/A-18E/F(슈퍼호넷)과 F/A-18A/C(호넷) 전폭기,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 2000)와 한국군 F-15K, KF-16 전투기를 포함한 200여대의 항공기가 참가함. 통상적인 연합해상훈련 때 20여척의 항공기가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의 항공기가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것임. 양국 함정과 잠수함 등 해상전력도 20여척이 참가함.
-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 9천200t급 이지스 구축함 맥켄 벨호(DDG85)와 존메케인호(DDG56), 라센호(DDG82), 독도함(1만4천t급), 3천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I)과 4천500t급 구축함(KDX-II)이 동해상에 전개됨.
- KDX-II 급으로는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퇴치 임무를 수행한 문무대왕함이 참가함. 문무대왕함에는 분당 4천500발을 쏘 6km 앞으로 다가온 미사일을 명중시킬 수 있는 근접방어무기인 30mm 골키퍼 2문과 32km까지 포탄을 날릴 수 있는 5인치 함포 1문, 함대공유도탄인 하푼 8기, 함대공유도탄인 SM-2 32기를 각각 장착되어 있음.
- 미국 항공모함과 우리 군의 경항모급인 아시아 최대수송함인 독도함이 연합훈련에 동시에 참가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 수중에는 오하이오급(만재배수량 1만8천750t급)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우리 해군의 1천800t급 잠수함 등이 작전을 펼침. 7함대 소속의 일부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1천600km의 원거리 타격용인 토마호크(순항) 미사일 150여기를 탑재하기도 함. 우리 군 잠수함은 어뢰와 기뢰, 잠대함 유도탄을 탑재하고 있음. 합참은 “한·미 양국은 천안함 공격과 같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공중, 지상, 해상에서의 전방위 대비태세를 포함한 완전한 형태의 한·미 동맹의 전투태세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작전명 “불굴의 의지”..美 군사적 지원능력 과시 = 이번 훈련은 ‘불굴의 의지’라는 작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지원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



관은 이와 관련, “이번 훈련은 구체적인 동맹의 방위능력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의 방어를 위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의 방어를 위한 미국의 지원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 유사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재천명한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음. 훈련은 적의 잠수함을 탐지, 수색, 공격하고 해상특수부대의 해상·수중 침투 저지, 실탄 및 포사격 등으로 이뤄질 예정임. 공중의 항공기와 해상의 함정, 수중의 잠수함에서 적의 잠수함(정)을 탐지, 수색, 공격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임. 잠수함을 포함한 양국 20여척의 함정은 상호 유기적 작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잠수함 탐지 훈련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의 해상특수부대의 침투 저지 훈련도 이뤄짐. 북한 해군은 2개의 해상저격여단과 공기부양정 130여척, 고속상륙정 90여척 등 260여척의 병력수송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 또 특수요원 1~2명이 수중 침투하는 데 이용하는 수중추진기(SBS-2)도 자체 개발한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음. 동해상에서 해상전력과 함께 움직이는 양국 전투기와 전폭기는 강원도 동부지역의 한 사격장을 목표로 삼아 실사격과 포탄사격을 하는 등 실전위주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 한·미는 이번 해상훈련을 시작으로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동·서해상에서 2차 해상훈련을 진행할 계획임. 이 훈련은 한국군의 전력이 주축이 된 가운데 미국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0월13일부터 이틀간 부산항 인근 해역에서 대북 군사조치의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차원의 역내 해상차단 훈련을 실시할 계획임. 역내 PSI 훈련에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 국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구축함과 지원함 등 3~5척의 함정과 해상초계기(P-3C), 헬기, 해군 및 해경의 선박승선 특공대 등이 투입될 예정임.

● “주일미군, 北 공격시 충분치 않을수도”(7/20)

- 리처드 마이어스 전 미군 합참의장이 오키나와(沖繩)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이 북한의 공격시 일본을 방위하는데 충분치 않을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음. 마이어스 전 미군 합참의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키나와에 미군 4만수천명이 주둔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일본을 완전하게 방위하는데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이 정도의 병력을 오키나와에 주둔시키고 있다는 자체는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마이어스 전 합참의장은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의를 적에게 어떻게 인식시키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상군이 주둔하



면 적은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국의 시점으로부터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대일안보조약을 중요하게 생각지않고 있다고 의심하는 국가가 있다면 신뢰성 있는 억지력을 보여줘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일 미군이 오키나와를 거점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 “해병대는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지만 광에는 항만 등의 인프라가 좋지 않은 등 마땅한 장소가 없다”면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이 정도의 (병력)규모를 간단히 수용할 수 있는 장소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美 “리처드슨 북한파견 검토안해”(7/20)

-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19일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북한파견을 미 정부차원에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명을 요구한 이 고위 관리는 리처드슨 주지사의 평양방문을 미 행정부가 긍정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보도내용은 부정확(inaccurate)하며, 우리 행정부는 리처드슨 주지사를 북한에 보내려는 어떤 고려도 하고 있지 않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또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리처드슨 주지사의 방북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은 리처드슨(주지사)을 북한에 보내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도 리처드슨 주지사가 지난해 8월 김명길 당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와 뉴멕시코에서 회동한 이후 북한은 리처드슨 주지사의 평양방문을 초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히고, “미 행정부가 천안함 사태 이후 북·미 대화를 위한 카드로 ‘리처드슨 카드’를 이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과거 북한에서 미국인 석방협상을 한 경험이 있는 리처드슨 주지사가 자신의 위상제고 등을 위해 최근 “북한에 갈 것”이라는 말을 주변에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 행정부가 특사 자격을 부여해 그를 평양에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 다른 소식통은 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이 열리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시점에 ‘리처드슨 방북’이 거론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 北신문 “한미 해상연합훈련, 엄중한 도발”(7/19)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달 하순 동해상에서 진행될 한미 해상연합훈련에 대해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신문은 논평에서 “최신예 전투기 80대를 탑재하고 1천km의 작전반경을 가진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투입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상연합훈련의 위험성이 드러난다”면서 “남조선 당국은 훈련 강행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에 미칠 파국적인 후과를 심사숙고해 전쟁연습 계획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와



이지스 구축함 3척 등 항모전투전단은 한미 해상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21~25일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임.

● <한·미 '2+2' 공동성명 의미와 내용>(7/21)

- 한·미 양국이 21일 사상 첫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통해 발표한 공동성명의 핵심은 결국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임. 앞으로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같은 추가 도발행위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한·미 양국의 분명한 입장이 담겨졌다는 평가임. 한·미 양국이 압도적 군사적 우위와 응징의지를 천명, 북한의 재도발 의지를 근원적으로 꺾어놓으려는 '대북 억지'의 의미로 볼 수 있음.
- 성명은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음. 여기서의 '심각한 결과'(serious consequences)는 강도높은 군사적 응징 또는 보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한·미 양국이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재확인한 한·미동맹 강화도 이 같은 대북 억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성명은 60년간의 한·미동맹에 대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왔으며 강력하고 성공적이며 지속적인 동맹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하고 "동맹협력을 양자적·지역적·범세계적으로 지속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음. 이는 한·미동맹을 동북아 안보의 '안전판'으로 활용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풀이임.
- 특히 양국이 앞으로 수개월간 동·서해를 무대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상징적 이벤트로 평가됨. 성명은 "북한의 어떠한 모든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음. 양국의 이 같은 연합훈련 계획 발표에는 그동안 훈련에 반대해온 중국에 대해 '군사주권적' 차원의 방어훈련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도 내포돼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됨. '전략동맹 2015'로 대변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대한 후속 협의는 연합방위의 틀과 동력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춘다는 의미를 갖음.
- 이런 맥락 속에서 '포스트 천안함' 국면의 대북 정책기조는 여전히 '압박'에 무게가 두어지고 있음. 이는 천안함 대응과 북핵 대응 이슈에 대한 성명의 언급에서 뚜렷이 확인되고 있음. 천안함 대응을 놓고는 북한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고, 북핵 대응을 놓고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임.
- 성명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을 환영하고 북한에 대해 "천안함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성명은 또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촉구했음. 특히 주목할 점은 성명이 북핵 문제를 언급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6자회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대목임.

-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최근 제기한 ‘6자회담’ 문제를 직접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모면하고 국면전환을 피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성명이 북핵 문제와 병행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한 점도 눈여겨볼 점임. 성명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음.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카드를 들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읽혀진다는 분석임.
- 이 같은 대응기조는 한·미 양국이 당장 ‘포스트 천안함’ 국면의 출구 전략에 시동을 걸기 보다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보가며 국면전환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됨. 양국 공동의 대북 압박 기조는 오는 23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무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성명은 “양국 장관들은 ARF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한 지역협력체제 내에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명기했음. 이번 성명은 한미동맹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음.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경제·사회·문화 분야로 동맹의 ‘폭’을 넓히고 협력의 ‘범위’도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키워나간다는 ‘동맹미래비전’을 구체화하는 의미임.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문제는 당장 가시적 결과물을 낳지 않았지만 양국 장관들이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점이 주목됨. 양국간 ‘뜨거운 감자’ 격인 원자력협정 문제도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둔 비확산 논의는 양국 군사·정치동맹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는 분석임. 이번 성명에서 또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이번 ‘2+2’ 회의가 차관보급으로 정례화되는 점임. 장관들의 바쁜 스케줄상 장관급 ‘2+2’ 회의는 연례화가 어렵지만 차관보급으로 레벨을 낮춰 ‘2+2’의 틀거리와 동력을 유지해나간다는 구상임. 성명은 이번 2+2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했다”고 평가했음.

● 한·미 산업협력 채널 본격 가동(7/21)

- 지식경제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상무부와 제1차 한·미 산업협력위원회를 열고 양국 간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음. 최경환 장관은 기초연설을 통해 “미국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수출진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선 자유무역의 확산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이른 시일 내 비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공식



에 참석한 LG화학의 2차전지공장을 양국 간 산업협력의 모범사례로 소개하며 다방면에 걸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진 무역·투자 분과 실무회의에서는 경제사절단의 교차 파견, 양국 고위급 행사의 정례화, 제3국 진출 시 애로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논의됐음. 산업기술·표준 분과위에선 ‘민관 항공협력 워킹 그룹’을 구성하고, 친환경 전기차와 인체통신 등 표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음. 전략물자 분과위는 인력교류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음. 최 장관은 또 게리 로크 상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열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음.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비준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한 것은 큰 진전”이라며 “양국의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조속한 한·미 FTA 비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美민주당, 한미FTA 찬반 의견 엇갈려>(7/21)

-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의원들 사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를 놓고 엇갈리는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음. 민주당의 거물급 상원의원인 존 케리(매사추세츠) 외교위원장과 제임스 웹(버니지아) 동아태 소위원장, 무소속이지만 친(親)민주당 성향인 조 리버맨(코네티컷) 국토안보위원장 등 10명의 의원들은 한미 FTA의 조기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20일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 앞으로 발송했음.
-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한미FTA가 미국의 수출을 늘려 일자리 창출 및 경기회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 및 미국의 대 아시아 영향력 유지 등에서 전략적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행정부가 한미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힘을 모아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음. 서한에는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정보위원장과 대니얼 이노우에(하와이) 세출위원장, 블랜치 링킨(아칸소) 농업위원장 등이 함께 서명했음.
- 주미대사관 측은 상원에서 한미 관계를 직접 다루는 상원 외교위원장과 동아태소위원장 등이 서명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의회내 한미FTA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음. 그러나 이와는 달리 달리 자동차산업과 농업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한미FTA의 원안 비준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했음.
- 민주당의 셔러드 브라운(오하이오) 상원의원과 데이비 스테브노우(미시간) 상원의원은 19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FTA의 원안 비준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앞으로 행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음. 이들 의원은 “현재의 한미FTA는 미국이 지금까지 옹호해 온 새로운 경로, 즉 노동·안전·환경기준의 강화와 자동차산업을 포함해 미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시장 접근, 공정한 투자환경 보장 등에서 미흡한



- 내용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 행정부가 의회와 긴밀히 협력, 한미 FTA의 내용을 둘러싼 우려를 해소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이들은 그러나 한미FTA의 내용 가운데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는지, 또 이를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음. 또 하원에서는 마이크 미슈(메인) 의원이 한미FTA와 미국의 통상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백악관으로 보내기 위해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진행, 15일 현재까지 민주당 하원의원 86명의 서명을 받았음.

다. 중·북 관계

● 中 투먼서 ‘두만강 관광축제’ 개막(7/25)

-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시에서 지난 23일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2010 두만강 관광축제”가 막을 올렸다고 연변일보 등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음.
- 투먼시 건립 45주년을 기념하고 중국 내 조선족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생명의 강, 희망의 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되며 두만강변 가요제와 조선족 가무단 공연,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등 풍성한 공연이 펼쳐짐.
- 두만강 관광축제 개막에 앞서 지난 22~23일 ‘두만강 문화포럼’이 열려 두만강을 기반으로 형성된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음.
-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남양과 마주하는 투먼은 변경지역의 소도시에 불과했지만 중국 국무원이 지난해 대규모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사업을 승인한 것을 계기로 훈춘(琿春)과 더불어 중국 동북지역 대외 무역 창구로 부상했음. 최근 연변하이화(海華)무역공사가 북한 당국의 청진항 사용권을 확보, 투먼에서 북한의 남양을 거쳐 청진으로 이어지는 동해 해상 루트가 열리면서 투먼 통상구가 국가 1급 통상구로 승격됐음.
- 투먼시는 중국과 북한의 변경지역 주민들이 통행증만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무관세 무역을 할 수 있는 호시(互市)무역 시장도 다음 달부터 운영할 계획임. 이번에 문을 여는 호시무역 시장은 1만㎡의 규모이지만 투먼시는 연차적으로 규모를 확대, 100만t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고 보세창고와 물류정보센터 등을 갖춘 1.36km²의 대규모 호시무역 시장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임.

● “中, 북한에 영향력 행사해야” <NYT>(7/25)

- 미국 뉴욕 타임스(NYT)는 24일 중국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대북 영향력을 적극 행사하라고 촉구했음. NYT는 이날 ‘북한의



최신 짜증내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외무성이 25~28일 동해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물리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오랜 기간 북한의 과잉행동을 부추겨온 중국은 북한의 오폭이 그야말로 오폭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사설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태 이후 단호한 결의와 동맹관계를 과시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음.

- 또 천안함 사태 직후 놀랄만한 자제력을 발휘해온 한국인들은 미국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으며, 반면 북한은 추가 도발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이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채택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서 명시적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은 빠지고, 북한이 책임을 부인한 내용은 포함된 것을 두고 북한이 '큰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짓이라고 평가했음.
- 또한 사설은 한미 연합훈련이 자극적이지 않은 가운데 힘을 과시하고, 한국 전함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식량 및 석유의 주 공급원으로서 거의 유일하게 북한의 도발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중국에 대한 주도면밀한 외교전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오바마 행정부에 제안했음.
- 미국은 특히 중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과정에서 강경한 비난 내용을 담는데 반대해온 만큼 북한을 제어해 나갈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촉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이치에 맞는 얘기는 하지 않고 대신 공해인 서해상에서의 한미훈련 계획에 반대하며 긴장을 조성한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음. 이어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북핵폐기를 위한 협상은 아무 진전이 없고, 미국 관리들은 사적으로는 중국이 6자회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한다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우회적으로 촉구했음.
-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최근 방한 기간 밝힌 미국의 추가 대북 금융제재 조치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할수도 있지만 중국으로 하여금 게임에 동참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음. 사설은 마지막으로 미 행정부 관리들은 강경한 성명전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포용정책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소개했음. 또 천안함 사태는 현상유지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도 주문했음.

● 北 “中과 6자회담 재개관련 대화유지”(7/23)

-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이 “북한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중국과 연락을 유지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음. 통신은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정부간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FF)이 열리고 있는 베트남 하노이발로 22일 북한-중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 북·중 양자회담에서 박 외무상과 양제츠 외교부장은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을 완전하게 이행하고 경제와 무역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가기로 합의했음. 통신은 그러면서 양 외교부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상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6자회담을 포함한 국제이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음.

라. 일·북 관계

● 최성용 “일본 납북자 다구치 살아있다”(7/22)

- 한국 납북자 단체 대표가 ‘(일본 납북자)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54)씨가 살아있고 요코타(横田) 메구미씨는 숨졌다’는 정보를 북측 관계자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혔음.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믿을 만한 북한 정보원으로부터 다구치씨가 현재 평양 만경대구역에 있는 모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같은 정보를 최근 일본 정부 관계자에게도 전달했다”고 말했음. 최 대표는 이 아파트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거론했고, ‘북한 정보원’은 일반적인 탈북자가 아니라 “평양에서 근무하면서 해외에 드나드는 관계자”라고 설명했음.
- 최 대표는 “이 정보원은 ‘북한이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폭파범인 김현희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다구치 씨도 숨졌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했다”며 “(일본인 납북자와 결혼했다는 북측 주장과 달리) 다구치 씨가 연하인 한국인 납북자 이종건(북한에서 사용하는 이름) 씨와 결혼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 최 대표는 다구치씨가 1979년 노르웨이에서 납치된 한국인 납북자 고상문(61.전 수도여고 교사)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평양 대성직매점(백화점)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을 바꾸지 않고 이름만 바꾸는 북한의 관행을 고려할 때 이종건씨는 1977년과 1978년에 홍도에서 납치된 이민교(51)씨거나 이명우(49)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됨. 그는 또 “같은 정보원으로부터 요코타 메구미씨는 숨진 것이 맞고, 북한에 있는 딸 은경(혜경)이가 ‘일본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가 숨졌다는) 내 얘기조차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섭섭하다’고 한다는 말도 들었다. 은경이는 김정은의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최근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정부 관계자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했음.
- 앞서 북한은 일본측에 “다구치씨가 1984년에 일본인 납북자인 하라 다다야키씨와 결혼했다가 하라씨가 숨진 뒤 1986년 7월에 교통사고



로 숨졌다”고 설명했고, 다구치씨가 KAL기 폭파범 김현희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이은혜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음.

- 하지만 북한이 제시한 다구치씨의 사망 관련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데다,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 있다가 일본으로 귀환한 납북자들이 “1986년 7월까지 다구치씨와 같은 초대소에 있었지만 결혼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음. 앞서 최 대표 는 2004년 북측 정보원으로부터 일본인 납북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가 한국인 납북자(김영남)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듣고 이를 한국과 일본에 알린 적이 있음.

● <김현희, 日 납북자 가족에 요리 대접>(7/21)

- 일본 방문 이틀째를 맞은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48) 씨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가족에게 부침개 등을 직접 요리해 대접했음.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김현희씨는 이날 오전 숙박지인 나가노(長野)현 가루이자와(輕井澤)에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의 별장을 방문한 납치피해자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북한명 이은혜)씨의 가족에게 부침개 등 한식을 요리해 대접했음.
- 다구치씨의 장남인 이즈카 고이치로(飯塚耕一郎.33)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약 4시간에 걸쳐 김씨와 면담했으며 회식도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북한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을 당시 다구치씨가 일본어 선생이었기 때문에 다구치씨의 가족에게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고 있음. 이즈카씨는 다구치씨의 오빠인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72)씨 등 가족과 함께 전날 김씨를 면담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김씨와 만나 얘기를 나눴음.
- 김씨의 일본 초청을 주도한 나카이 히로시(中井治) 공안위원장은 김씨가 납치피해자 가족들에게 식사를 손수 요리해 대접하고 싶다고 해 숙박지를 하토야마 전 총리의 별장으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음. 김씨는 이날 다구치씨의 가족들에게 다구치씨 외의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관련 “본적이 있다는 인물이 있어서 이를 일본 경찰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음. 김씨는 이날 오후에는 또 다른 납치피해자인 요코다(横田) 메구미씨의 부친인 시게루(滋.77)씨, 모친인 사키에(74)씨 등을 만났음.

● 日, 북한에 외상 회담 타진(7/20)

- 일본 정부가 북한에 외상 회담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23일부터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포럼(ARF) 기간에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과 박의춘 북한 외상간 회담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 일본 정부는 교착상태에 있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한국의 천안함 침몰사건 등과 관련한 협의를 원하고 있으나, 북한은 일



총과 수류탄 등을 꺼내 현장에 있던 성지순례단과 다른 승객들을 향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한 사건임. 이 사건으로 푸에르토리코 성지순례단 17명을 포함해 민간인 26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했음.

- 한편 이번 판결은 북한의 테러지원활동을 확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난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북한은 로 드공항 사건 훨씬 이후인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1988년 1월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뒤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인 2008년 명단에서 빠졌고, 그 이후로는 특별히 테러지원 활동을 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임. 공화당의 샘브라운 백 상원의원,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의원 등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으나, 미국 국무부는 아직까지 북한의 테러지원 활동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오늘부터 동해서 연합훈련 돌입(7/25)

-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나흘간 일정으로 25일 시작됐음. 한미연합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부산항에 정박한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를 비롯한 한·미 해군 함정 수척이 오늘 오전 7시께 부산항을 출항해 동해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음.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함정들은 부산항과 진해항에서 출항했으며, 미 7함대 소속 원자력잠수함 등 일부 함정은 동해상에서 합류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불굴의 의지’라는 훈련명칭으로 동해 전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조지 워싱턴호와 아시아 최대수송함인 독도함(1만4천t급), 3천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I), 4천500t급 구축함(KDX-II)인 문무대왕함 및 최영함, 1천800t급 잠수함, 해양 탐사선 등 양국 함정(잠수함 포함) 20여척이 참가했음.
-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F-22 전투기 4대를 비롯한 F/A-18E/F(슈퍼호넷) 및 F/A-18A/C(호넷) 전폭기,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 2000)와 한국군 F-15K, KF-16 전투기, 대잠 초계기(P3-C), 대잠 헬기(링스)를 포함한 200여대의 항공기도 훈련에 참여함. 또 양국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병력 8천여명도 훈련에 참가할 계획임.
- 연합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요원도 참가한 가운데 네트워크 방어전, 연료 공급과 지휘통제(해병대), 대잠훈련(해군), 공중급유와 실



무장 합동타격훈련(공군) 등으로 진행되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도 훈련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27일에는 천안함 피격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전과 유사한 대함사격 훈련도 진행됨. 이 훈련에서는 실제 어뢰를 발사하고 이를 격파하기 위한 폭뢰 및 기만 기뢰 등이 투하됨. 일본측의 요청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대령 등 장교 4명이 조지 워싱턴호에 탑승해 훈련을 참관함. 일본 자위대원의 연합훈련 참가는 이번이 처음임. 한-미는 이 훈련에 이어 9월 중으로 서해에서 고강도의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임.
- 한편 전날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동해상에서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등과 관련해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당당히 맞서나갈 것”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의도적으로 정세를 전쟁점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응하여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 “美의회 FTA 격론 예상했던 일”>(7/23)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앞두고 미 의회에서 찬반 격론이 격화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23일 미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음. 정부는 특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한미 FTA에 대해 불만과 우려를 드러내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보다 그동안 한미 FTA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내 중진들이 나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음.
-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109명이 한미 FTA에 대해 우려되는 사항이 많으며 ‘커다란 변화(major changes)’를 요구한 데 대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음. 이 당국자는 “서명에 참여한 의원 109명은 민주당내에서 자유무역에 반대해온 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무역실무그룹’(trade working group) 소속”이고 “여러 차례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반대를 주장해온 의원들”이라고 말했음.
- 또 이미 미국 정부가 실무협의 대상으로 언급한 자동차, 쇠고기뿐만 아니라 섬유, 금융서비스, 투자, 노동관련 등 다른 FTA 분야도 논의 하자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상 실무협의를 깨자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30일 실무협의 때 다른 분야도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된다.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은 좋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음.
- 이들 의원 대부분은 FTA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완강해 애초부터 한미 FTA를 지지토록 설득하기가 어려운 대상들일 뿐만 아니라 이



들의 의사표명이 다분히 11월 선거를 의식한 행동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일각에선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한미 FTA를 찬성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257명 가운데 70명만 찬성해도 의회 비준동의는 가능하다”며 “‘109명’이라는 숫자가 한미 FTA를 무산시킬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음. 반면에 정부는 2004년 대권후보였던 존 케리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다이앤 파인스타인 정보위원장, 대니얼 이노우에 세출위원장, 블렌치 링컨 농업위원장, 조 리버먼 국토안보위원장 등 민주당 또는 민주당 성향 무소속 상임위원장 등 중진의원 10명이 한미 FTA 지지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데 대해 잔뜩 고무되었음.

- 의원들은 서한에서 한미 FTA가 미국의 수출을 늘려 미국내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회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 및 미국의 대 아시아 영향력 유지 등에서 전략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미 FTA 비준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힘을 모아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당국자는 “그동안 민주당에선 한미 FTA에 대해 소극적인 분위기였는데 상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임위원장이 앞장서 한미 FTA 조속 비준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음. 한편, 실무협의를 관련, 정부는 미국의 요구안을 미리 예단해 대응하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내부 의견수렴절차를 걸쳐 구체안을 제시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한·미 ‘전략동맹 2015’에 뭘 담나>(7/22)

-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논의된 ‘전략동맹 2015’에 담긴 현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유명환 외교, 김태영 국방장관과 클린턴 미국 국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등 4명은 지난 21일 열린 2+2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올해 10월 초 한미안보협의회(SCM) 때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음. 전략동맹 2015는 한마디로 이미 수립된 ‘전략적 이행계획’(STP)의 수정 및 증보판이라고 할 수 있음. 한·미는 애초 2012년 전작권 전환에 맞춰 전구(전쟁구역)작전 지휘체계, 군사협조체계, 신(新)작전계획(가칭 작계 5015), 전구작전 수행체계, 전작권 전환기반, 연합·합동연습체계 구축 등 6대 과제로 구성된 STP를 발전시켜 왔음.
- 하지만 전작권 전환시기가 2015년 12월1일로 늦춰지면서 STP의 수정 및 보완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전략적 이행계획을 만들기로 합의했으며, 이 계획을 전략동맹 2015라고 명명했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임. 오는 10월 초 미국에서 개최되는 SCM 이전에 완성될 전략동맹 2015에는 크게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에 따른 보완과제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의 새로운 일정표와 수정된 과제들이 담기게 됨.



-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합동사령부와 평택의 미국 한국사령부(KORCOM)를 두 축으로 하는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란 전구작전 지휘체계 구축 일정이 제시됨. 우리 군은 2011년 말을 목표로 합동사령부 청사를 신축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연내에 KORCOM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임. KORCOM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 합참과 공동작전을 펼치는 전투조직으로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체하는 조직임. 연내에 창설되면 현재 건설되고 있는 평택기지 내 청사로 2015년께 이전할 것으로 관측됨. 전작권 전환 이후 양국 군의 군사협조체계 구축 일정도 수정될 전망이다.
- 양국은 원활한 군사협조를 위해 동맹군사협조본부, 연합공군사령부, 연합 징후 및 정보운영본부, 연합작전협조단, 통합기획참모단, 연합군수협조본부, 연합 C4I(지휘통제체계) 협조반, 다국적협조본부, 연합모델 및 시뮬레이션 협조본부, 합동 전장(戰場)협조단 등 연합 협조기구를 만들 계획임. 현행 연합사 작전계획인 ‘작계 5027’을 대신해 수립되고 있는 신작전계획도 보완됨. 한미는 2012년까지 연합사가 주관이 되어 작계 5027을 적용해 연합훈련을 하되, 오는 2013년부터 새로운 작계 5015를 적용한 연합훈련을 할 계획임.
- 이에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전략동맹 2015는 이미 수립된 STP의 수정판”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에 따라 연합연습계획을 어떻게 조정하고 새로운 작전계획(작계 2015)의 보완 일정, STP 보완 등을 포괄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일정도 전략동맹 2015에 반영될 것임.
- 한·미는 지금까지 협상에서 용산기지를 2015년까지 평택으로,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 2사단을 2016년 초까지 평택으로 각각 이전키로 잠정 합의한 상황임. 장 실장은 이와 관련, “용산기지 이전(YRP)과 미 2사단 이전(LPP) 일정 등도 전략동맹 2015에 반영될 것”이라며 “이들 사업은 2015년과 2016년 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동맹 2015에는 지난 60년의 한미동맹을 평가하고 미래 한미동맹 비전도 들어갈 것”이라며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에 따라 양국이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 <李대통령 “한미 60년 동맹관계 마음 든든”>(7/21)

-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참석차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접견했음.
- 이 대통령은 “한반도와 대한민국,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오셔서 감사하다”면서 환영했음. 특히 “오늘 판문점과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천안함 사태 희생자, 6.25 전쟁 희생자를 직접 참배한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미 60년 동맹 관계에 정말 마음이 든든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오



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을 봤다. 회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 그러면서 “클린턴 장관의 딸이 오는 31일 결혼한다고 알고 있는데 부모로서 정말 기쁜 일”이라며 축하했음. 이에 대해 클린턴 장관은 “오늘 역사적인 회의를 했고, 한국 정부와는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협력해 일하는 게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지금까지 긴밀한 협력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답했음. 클린턴 장관은 또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더욱 많이 깊어질 것”이라며 “곧 서울 G20(주요 20개국) 회의가 열리는데 한국의 리더십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음. 이어 게이츠 장관은 “제가 청와대에 처음 왔던 게 25년 전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의 한미동맹이 제일 공고하고 협력할 기회도 많아졌다”면서 “지난 몇달 동안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고 앞으로 더 많이 달성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후 만찬을 함께 하며 양국 우의를 다졌음. 이날 접견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장관, 한덕수 주미대사 등이 배석했음.

● <한미 외교·국방 4인의 동행..동맹 과시>(7/21)

- 한미 간에 처음으로 ‘2+2회담’이 열린 21일 양국 외교·국방장관 4명은 온종일 일정을 같이했음.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의지가 느껴졌음.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본관 19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회담장 내 국기 배치에서부터 한미동맹의 오늘이 상징적으로 표현됐음. 각각 12명씩 마주 본 회담 테이블 앞쪽 단상에 우리 대표단 측에는 미 성조기가, 미측 대표단 쪽에는 태극기가 자리 잡았음. 4명의 장관 좌석은 다른 배석자들보다 높은 노란색 방석의 의자가 배치됐음.
- 회담은 당초 오후 1시45분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오전 일정이 늦어지면서 오후 2시34분께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우리 측의 유명환 외교장관, 김태영 국방장관 순으로 회담장에 모습을 드러냈음. 4명의 회담 주역은 운동경기 전에 마치 파이팅이라도 하듯 회담테이블 앞쪽 단상에서 함께 손을 포개 모으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했음. 이 과정에서 힐러리 장관이 가벼운 농담을 던진 것으로 보였지만 소리가 작아 귓전에 머물렀음. 사진 촬영 후 힐러리 장관은 자리로 이동하면서 좌중을 향해 손을 흔들며 “How are you”라고 인사를 건넸고, 유명환 장관의 “작년 11월에 양국 정상회담이 합의한대로..”라는 모두 발언 시작과 함께 양국은 취재진을 회담장 밖으로 물리고 본격적이 회담에 들어갔음.
- 양국 4명의 장관이 회담장에 도착하기 전 외교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측 성 김 북핵특사를 회담장 구석으로 불러 회담 공동성명으로 보이는 듯한 문건을 들고 상의하는 모습도 목격됐음. 회담장 출입문 쪽에는 중앙의 유명환 장관 오른쪽으로 한덕수 주미대사,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용준 차관보, 김재신 대통령의



교비서관과 장호진 북미국장이 순서대로 자리했음. 역시 중앙의 김태영 국방장관 왼쪽으로는 한민구 합참의장과 정승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장광일 국방정책실장, 정홍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류제승 정책기획관이 앉았음. 회담장 참가 쪽의 미측도 중앙의 힐러리 국무장관 왼쪽으로는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앤드루 샤피로 정치군사담당 차관보,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과 성 김 북핵 특사가, 중앙의 게이츠 국방장관 오른쪽으로는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 로버트 윌러드 태평양군사령관, 윌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윌리스 그레그슨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존 케넌 군사보좌관이 순서대로 자리를 잡았음.

- 회담은 시작 1시간30여 분만인 오후 4시5분께 끝났음. 오전부터 우천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전체 회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졌음. 회담장 밖은 경호원들이 2중, 3중의 경호를 펼쳤음. 회담이 끝나고 4명의 장관은 정부중앙청사 본관 옆 별관으로 옮겨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음. 기자회견 역시 당초 예정인 오후 4시보다 15분 지연된 4시15분에 시작돼 55분까지 진행됐음. 유 장관과 힐러리 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은 질의 응답과정에서 4명의 한미 외교·국방 수장들의 비장한 표정과 함께 강력한 대북억지 의지를 표시했음. 양국 외교·국방장관들은 오전에는 비무장지대(DMZ)의 오울렛 초소와 자유의 집,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잇따라 방문하며 강력한 대북억지 의지를 보였음. 특히 공동경비구역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김태영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돈독한 우의를 과시하듯 함께 같은 우산을 받쳐 들어 눈길을 끌었음.
- 4명의 외교·국방 수장들은 군사분계선(MDL)을 불과 3~4m 거리에서 MDL과 등을 지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는 동안 우리 측 경비병들이 뒤에서 둘러싸 ‘인의 장막’ 경호를 펼쳤음. 또 회담 직전에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6.25전쟁 유엔군 전사자 명비와 천안함 46용사 명비에 헌화하고, 전쟁기념관 앞 평화의 광장에서 양국 의장대와 군악대의 사열을 받았음. 회담장 주변뿐 아니라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서울시내 숙소는 물론, 이동과정에서도 철통같은 경호가 펼쳐졌고, 동선과 일정도 이들의 현장을 벗어날 때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음.

● 美 추가 대북 금융제재..한·미 ‘2+2’ 회의(7/21)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1일 천안함 사건 후속대응과 관련, “(핵)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주체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북한 무역회사의 불법 활동과 관련 은행들의 불법적 금융거래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음.
- 클린턴 장관은 특히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으로 북한 지도부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는 고강도 독자 금융제재를 검토중



임을 시사해 천안함 후속대응을 둘러싸고 한·미와 북한과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클린턴 장관은 이날 사상 첫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가진 뒤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권한을 제공해 불법적인 북한의 활동을 중단하는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클린턴 장관은 이어 “추가 제재 이외에도 안보리 결의 1718, 1874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핵확산이나 불법 활동을 하는 주체들을 파악하고 압력을 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BDA식 금융제재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대북 제재는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몇년전 우리는 국무부와 재무부를 통해 BDA 사건을 통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냈다”고 밝혀, 이를 긍정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클린턴 장관은 “현재 안보리 결의안에서는 지정된 것처럼 핵확산 관련자들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은 외교면책을 남용하고 있다”며 “각국의 확산방지 물품을 사지 못하도록 하고 무기와 사치품과 관련한 불법활동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조만간 방한해 금융 제재를 중심으로 한 양자 제재조치를 우리측과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가능성있는 노력을 하고 6자가 모두 합의를 하면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후계(승계)계획을 진행중이며 어쩌면 도발행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면밀히 주시하고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이어 “추가로 역지를 강화하면서 위협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의 확증은 없지만 경계를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한·미 양국은 2+2 직후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가라”며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들은 성명에서 지난 9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을 환영하고 이 같은 무책임한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천안함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들은 또 천안함 후속대응의 일환으로 동해와 서해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언급하고 “북한의 어떠한 모든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



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앞으로 외교·국방당국간 차관보급 ‘2+2’ 회의를 정례화해나기로 했음.

● 클린턴 “北 비핵화 조짐 보이지 않아”(7/21)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1일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북한이 가능성있는 노력을 하고 6자가 모두 합의를 하면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사상 첫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가진 뒤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줘야 하며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천안함 사태 이후의 출구전략과 관련, “출구전략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 한·중 관계

● <한미연합훈련 돌입에 대한 中반응>(7/25)

- 중국은 한·미 연합훈련이 동해에서 시작된 25일 언론매체들을 통해 훈련돌입 사실과 북한의 반응 등을 크게 보도하며 긴장 속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임. 한미훈련에 강력 반대해온 중국은 이날 오전 현재 외교부를 통해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으나 중국 언론들은 이번 훈련이 34년만에 한미연합훈련사상 최대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 항모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해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군함과 전투기 등 규모와 전력을 상세히 소개했음.
- 언론매체들은 또 이번 훈련이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한 경고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구심과 경계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음. 언론은 한미연합훈련 돌입과 함께 북한의 반응도 같은 비중으로 전했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4일 이번 훈련과 관련, “우리는 대화와 전쟁에 다 준비되어 있다”고 호언했고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도 이날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보복성전’을 다짐하는 등 대미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는 사실을 전했다.
- 중국 언론은 또 한국의 신문을 인용, 하와이에서 진행 중인 림팩 훈련에 참가한 우리 해군의 잠수함 이역기함이 지난 주 실시한 미사일 발사 시험에 실패했다고 보도했음. 중국 언론은 또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21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한미 연합군사 훈련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서해) 및



기타 중국의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 중국은 그동안 미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 여부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서해를 포함한 근해에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들어오는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해 왔음.

● 中 “한국 순항미사일 개발 신경 쓰이네”(7/25)

- 중국은 25일 동해에서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한국이 사정 1천500km인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데 대해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았음.
- 중국 광저우일보(廣州日報)는 이날 중국국방보를 인용, 한국 순항미사일 ‘현무-3C’의 개발 사실을 집중부각하면서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미사일 제조기술을 우방에 확산시킨 결과라고 우회적으로 비난했음. 사정 1천500km의 현무-3C는 미국의 BGM-109형 토마호크 미사일을 모델로 한 것으로 미국이 기술을 전수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주장임.
- 신문은 이 미사일이 한국 중부전선에 배치되면 핵시설을 포함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10여개 주요 도시가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었음. 신문은 한국이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1천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4번째 국가가 됐다는 점도 부각시켰음. 또한 인도가 지난 3월 발사후 방향조종이 가능한 초음속 순항 미사일 브라모스(BrahMos)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대해서도 주목하면서 중국이 주변국의 미사일 공격망에 포위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음.
-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19일 1면 머리기사에서 한국군 관계자를 인용, 한국의 미사일 개발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냉정치 못한 태도는 동북아시아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동시에 천안함 사건을 핑계로 감히 뛰어들 생각을 못했던 금지구역에 뛰어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면서 불만을 표시했음.

● <연합시론>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의 반발 변수(7/21)

- 일요일인 25일 개시하는 한미 연합 기동훈련을 위해 미 7함대 소속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21일 오전 부산에 기항했음. 항모전단의 이지스 구축함인 맥 켐벨호와 존 메케인호도 해군 부산기지에 입항했음. 유도미사일 구축함 라슨호는 한국 해군의 모항인 진해에 머무. 항모전단은 28일까지 동해에서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함.
- 2년도 안 돼 부산을 재방문한 이 핵 추진 항모는 2008년 9월부터 미 7함대에 배속돼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음. 비행갑판 길이가 360m에 달하는 이 항모는 미 해군의 최신예 전폭기와 조기경보기 등 항공기 60대를 탑재하고 있음.



- 이지스 순양함 4척, 구축함 7척과 핵잠수함을 거느리고 작전 반경이 1천km에 이른다는 이 항모전단은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위해 전진배치돼 있음. 바다로 떠다니면서 해상은 물론 공중과 수중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기지임. 조지 워싱턴호의 이번 한국행은 적의 공격을 억제하고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을 보이는 것임. 함장인 데이비드 라우스먼 대령의 공언임.
- 이 항모는 부산 기항 중 한국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리셉션과 관함 행사를 하며 5천여 승조원 중 일부는 보육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 예정임. 북한을 상대로 강력한 무력시위를 하면서 한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내외에 과시하는 것임.
- 조지 워싱턴호가 부산의 해군기지에 입항한 21일 오후 서울에서는 6·25 전쟁 발발 60주년을 계기로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음. 회담 후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가라”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음. 양국 장관들은 또 천안함 침몰사태 후속대응의 하나로 수개월간 동해와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한다는 계획을 언급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 또 지난해 6월 양국 정상간에 합의된 ‘동맹 미래비전’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동맹협력을 양자적·지역적·범세계적으로 발전시켜 폭과 깊이를 확대해나가기로 재확인했음. 한미동맹이 격상되고 강화되는 흐름이 다시 읽히는 대목임. 후텐마 기지 논란 이후 이완기류를 보이는 미일동맹의 위상을 한미동맹이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음.
- 다만, 미 국방부 대변인이 1주전 7함대 항모전단 등과 함께 양국의 육해공군, 해병대 8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훈련 계획을 브리핑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언급한 현실도 냉정하게 참고하는 자세가 필요함. 미국의 동북아 동맹 축이 미일동맹에서 한미동맹으로 이동하는 기류 속에 중국이 과민 반응하는 점도 역시 새로 두드러지는 문제임.
- 중국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하고 나선 것도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미·중간 신경전의 연장으로 볼 수밖에 없음. 중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동중국해에서 미사일 발사훈련을 한데 이어 서해(황해)에서 전시 대비 해상수송 긴급훈련도 처음 실행했음.
- 가깝게는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연상되고 멀게는 구한말 동북아 정세의 지형을 바꾸게 된 청일전쟁 전야를 상기하게 됨. 바로 얼마 전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천안함 사태 책임을 추궁하려던 우리의 외교 노력이 중국이란 벽에 부딪혔다는 사실도 중시해야 함. 오히려 한반도가 남북으로 양분되지 않았던 구한말보다 지금 상황은 더 복잡함. 한반도 정세의 최대 당사국인 우리 한국이 문제 해결의 관건인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만 끌고 갈 수 없는 이



유입. 도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대좌도 필요하듯이 제재와 대화의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해나갈 때가 아닌가. 현재의 외교·국방·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서의 핵심 진용을 그대로 두고 구태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거국적으로 한 번 더 심각하게 숙고해봐야 함.

● 류우의 “한미훈련, 연례·방어적 훈련”(7/20)

- 류우의 주중 한국대사는 20일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중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는 이해되지만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점에서 걱정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류 대사는 이날 이날 창춘(長春) 소재 지린(吉林)대학에서 가진 ‘동북아의 미래와 동북지방’이라는 제목의 강연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국 영해 내에서 (천안함이) 군사도발을 받지 않았다면 이번 동·서해 군사훈련은 주목받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의 언급은 중국 국책사업인 공자교사훈련과정에 참여 중인 학생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중국 네티즌의 비난이 뜨겁다”고 소개하면서 “군사훈련이 동북아 미래에 어떤 이익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임.
- 류 대사는 이어 “한미 군사동맹은 근세역사에서 한국의 안보를 지켜온 기본적인 대외관계로, 그 같은 군사훈련은 지속돼 왔다”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은 그런 군사동맹이 있어 가능했고 그래서 동·서해 군사훈련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고 덧붙였음. 류 대사는 또 북한문제와 관련, “북한이 무력도발과 핵개발을 포기하고 건강한 국제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로 개혁과 개방에 나선다면 북한을 도울 수 있으며, 그 협력 규모는 과거보다 클 수 있고 국제사회와 손잡고 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언급했음. 이와함께 “개혁과 개방만이 북한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고 한반도와 동북지방이 지리적 잠재력을 발현하면서 공존공영할 수 있다”며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밝고 넓은大道(大道)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류 대사는 “동북지방은 중국만을 놓고 보면 주변이지만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 관점에서 보면 중심으로, 북으로는 몽골과 러시아와 연결되고 남으로는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 “부존자원은 물론 농업과 임업 등에서 가능성이 무한하지만 북한과 접경을 이룬 탓에 대양으로 나가는 길이 막혔다”고 진단했음.
- 그는 특히 “북한이 폐쇄적인 고립을 택하면서 인근 지역 간에도 사람과 물자, 자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북지방의 발전이 더딘 것은 이런 공간적 유통의 장애에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음. 그는 그럼에도 “동북아 경제권에는 황해권과 동해권이 있으며 이 공간이 겹치는 곳이 한반도와 동북지방으로 서울과 평양, 장춘을 잇는 선이 바로 발전축”이라며 “이 발전축이 제대로 구축되면 동북아는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기술 및 자본이 만나는 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아울러 “동북아 지역 내부의 경제 발전의 차이, 정치체제의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상호작용을 실행할 의지가 있다면 동북아경제공동체의 실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음.

다. 한·일 관계

● 한·일 “北 도전 않도록 압력 가해야”(7/23)

- 한국과 일본은 22일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국제사회에 도전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음.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 중인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이날 오후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만나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이 전했다.
- 김 대변인은 “유 장관은 특히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고 오카다 외상도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 장관은 후속 대응 조치와 비핵화 추진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음. 유 장관과 오카다 외상은 또 올해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앞으로 새로운 한일우호협력 100년을 향해 나가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같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 김 대변인은 “양국 장관은 오는 9월 한일신시대공동연구의 결과 발표를 환영하며 양국 정부가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일FTA(자유무역협정)도 앞으로 관심을 두고 노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음.
- 양국 장관은 또 오는 11월 각각 열리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군축·비확산 문제와 아프간 공동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협의했음.
- 유 장관은 이에 앞서 EU(유럽연합) 대표로 ARF에 참석하는 야노시 머르토니 헝가리 외교장관과 만나 한·EU 양자관계와 천안함 사태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김 대변인은 “양측 장관은 서명절차가 진행 중인 한-EU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유 장관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우리측에 대한 EU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고, 머르토니 장관은 한반도 안정의 확보를 위해 우리 입장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日, ‘조선왕실의궤 반환 검토’ 부인(7/21)

- 일본이 강탈한 조선왕실의궤 등 문화재를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했음. 일본 정부 대변인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궁내청에 보관 중인 조선왕실의궤 등 문화재의 반환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로부터 (반환) 요청이 있었는지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2월 방한한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에게 조선왕실의궤 반환에 대한 국내의 기대감을 전달한 것과 관련, ‘정식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됨.

- 고다마 가즈오(兒玉和夫) 외무성 국제보도관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와 관련, “(한국에의) 인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음. 교도통신은 또 “문화재 반환에 응하면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결론이 난 여러 문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일본 정부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 앞서 한국 일부 매체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이 내달 한국 강제병합 100년에 맞춰 총리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조선왕실의궤 등 문화재 반환 방침도 같이 밝힐 것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음.

● 日, 이천오층석탑 반환 또 거절(7/21)

- 일제 강점기에 ‘이천 오층석탑’을 가져간 일본 오쿠라(大倉)문화재단 측이 석탑 반환을 다시 한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병돈 시장 등 경기도 이천시와 석탑 환수위원회 관계자 7명은 21일 오후 3시부터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오사키 이와오(大崎磐夫.81) 이사장 등 오쿠라문화재단 관계자 3명과 석탑 반환 협상을 벌였음. 조 시장 등은 이날 협상에서 이천시민 10만여명의 석탑 반환 서명부 사본을 전달했음.
- 환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사키 이사장은 협상을 시작한 직후 “문화재가 원래 있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100년 가까이 (우리가 석탑을) 잘 보관했으니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며 석탑 반환을 다시 한번 거부했음.
- 오사키 이사장은 서명부 사본을 전달받은 뒤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2008년 9월에 첫 협상에 이어 2차 협상에서도 다시 한번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됨. 환수위 김나영 사무국장은 “오사키 이사장이 직접 협상에 나서서 석탑이 일본으로 옮겨진 경위와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는 등 관심을 보인 것은 성과”라며 “향후 다시 한 번 만나서 반환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기대감을 접지 않았음.
- 이천 오층석탑은 고려 초기 이천시 관고동에 세워졌으나 조선총독부가 1914~1915년께 석탑을 경복궁으로 옮겼다가 1918년 오쿠라재단과 관련된 오쿠라토목조(현 다이세이건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본으로 반출하게 했음. 이천 오층석탑은 현재 도쿄 오쿠라 호텔 뒤뜰에 세워져 있음.



라. 미·중 관계

● 中, 美에 남중국해 관여말라 경고(7/25)

- 중국 외교부는 25일 미국에 대해 영토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국제 이슈화하려고 들지 말라고 경고했음. 양제츠 외교부장은 외교부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이 문제를 국제화하고 다자적인 것으로 만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하면서 “그것은 단지 문제를 더 악화시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관행은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최상의 방식이 관련국들간에 직접적인 양자 협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남중국해는 미국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 양 외교부장의 이번 성명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베트남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RF) 연설을 통해 남중국해 영토분쟁 해결이 이 지역 안정에 중심이라고 한 뒤 이틀만에 나온 것임. 클린턴 장관은 당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자유롭게 항해하고 아시아의 공동수역에 제한 없이 접근하는데 국가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존중한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클린턴 장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강압이나 위협 없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음.
- 이에 대해 양 외교부장은 클린턴 장관의 발언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중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하면서 중국이 남사군도(南沙群島)와 서사군도(西沙群島)에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지만 이 지역에 평화가 유지돼왔다고 반박했음. 양 외교부장은 이어 “합리적 관심의 표현이 강압이나”라면서 “이것(클린턴 장관 의 남중국해 발언)은 옹호될 수 없다”고 말했음. 그는 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장(場)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음.
- 중국,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등 인접국들은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원유수송 해상항로가 지나가는 이 지역에는 풍부한 어자원뿐만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美-中 ARF서 남중국해 ‘격돌’>(7/24)

- 미국과 중국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했음.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3일 열린 ARF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핵심이해’(핵심이익) 사안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임. 클린턴 장관은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는 ‘중요한 외교적 사안’이며 ‘지역안보에 결정적인 문제’라고 말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음.



- 특히 클린턴 장관은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통행의 자유에 대한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클린턴 장관의 발언으로 회의에 참석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화가 났을 것이라고 SCMP는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초 미국에 대해 남중국해가 자국의 주권 및 영토보전과 관련된 핵심이해 사안이라고 공식 통보한 바 있음. 이 같은 상황에서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됨.
 - ARF 회의에서도 아세안 회원국들은 난사(南沙, 스프래틀리)군도의 영유권 문제를 강도높게 제기했다고 한 회의 참석자는 전했다. 의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토론은 매우 격렬했으며, 중국은 수세적인 입장이었다”면서 “양제츠 장관은 틀림없이 화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난사 군도의 경우 중국·대만·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 등이, 시사(西沙, 파라셀)군도의 경우 중국·대만·베트남 등이 각각 섬 전체 또는 일부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국의 ‘핵심이익’ 지역으로 규정하고 울들어 이 해역에서의 지배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음.
 - 중국은 지난 4월 일본 오키나와섬과 미야코 군도 사이의 해협,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해협, 난사 군도 주변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등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음. 또 지난달 16일부터 어족자원 보호를 이유로 난사군도와 시사군도 주변 수역에 대한 어로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美, 中견제위해 동남아 접근 강화”<WP>(7/23)
- 미국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동남아 국가들에게 집중적인 구애를 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23일 보도했음. WP는 미국이 최근 각종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동티모르 민병대 학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금지해온 인도네시아 특수부대(코파수스.Kopassus)와의 안보협력을 재개하기로 한 사실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음. 그러면서 이 일이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전통적 동맹국인 한국·일본뿐 아니라 부시 행정부 시절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동남아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분석했음. 미국은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반미주의자로 알려진 마하티르 전 총리 집권 시절 한동안 깔끄러웠던 말레이시아와도 급속히 관계를 개선하고 있음.
 - 안와르 이브라힘 전 말레이시아 총리의 ‘동성 성폭행’ 관련 재판이 나지브 라자크 현 총리의 ‘정치탄압’이라는 의혹이 서방에서 힘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지난 4월 핵안보정상회의(워싱턴) 계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이나 22일 말레이시아가 의료요원을 중심으로 아프간에 처음 파병한 것이 보여주듯 ‘밀월기’를 보내고 있음.



-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인 라오스와의 지난 13일 베트남전쟁(1960-1975년) 이후 최고위급 접촉인 외교장관 회담(워싱턴 D.C.)을 가졌음. 양국은 외교관계를 전면 단절한 적은 없었지만 베트남전때 미국이 월맹군 보급로 차단을 위해 라오스에 수백만발의 폭탄을 투하한 이후 꺾끄러운 관계였음. 또 최근 미측이 북한-미얀마 핵협력 의혹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소 퇴색되긴 했지만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이 ‘깡패국가’로 간주했던 미얀마와 지난해 대화를 재개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됨.
- WP는 최근 미국의 대 아시아 외교 행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채택했다”고 분석했음. 중국에 대한 ‘인내’와 ‘조용한 관여’의 기조를 접고 ‘할 말 하는’ 기조로 돌아서는 동시에 중국의 ‘뒷밭’인 아세안을 공략하는 ‘양동작전’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임.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름에 하기로 예정됐던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계획을 연기했을 때만 해도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를 하려는 듯 보였지만 올 1월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중국의 인터넷 규제를 잇달아 비난한 것을 시작으로 대중 외교 전술을 수정했다고 WP는 지적했음. 한편 지난 20일 베트남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아세안은 미국을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미국은 23일 올가을 아세안 정상들을 워싱턴 D.C.에 초청하겠다고 밝혔음.

● “美, BDA식 대북제재..中에 협조요청”(7/23)

- 미국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금융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며, 중국에 대해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음. 미국의 한 관리는 “과거 방코델타아시아 사건은 평양에 대해 타격을 가했다. 그것은 그들(북한 지도부)에게 압력이 됐다”면서 “우리는 다시 그와 같은 방식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음. 그러나 이 관리는 대북 금융 제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음.
- SCMP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협조요청과 관련해 중국의 은행에 예치돼 있는 북한 자금의 동결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음. 그러나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FF)에 참석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아직까지 미국측의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핵)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주체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북한 무역회사의 불법 활동과 관련 은행들의 불법적 금융거래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미국 재



무부는 지난 2005년 9월 15일 애국법 311조에 따라 마카오 소재 은행인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그 곳에 예치된 북한 예금 2천500만 달러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음.

● 中, 한미군사훈련에 ‘반대’ 재차표명(7/21)

- 중국은 한·미 양국이 오는 25~28일 동해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했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한미 연합군사 훈련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서해) 및 기타 중국의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중국은 그동안 미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 여부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서해를 포함한 근해에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들어오는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해 왔음.
- 친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지역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훈련에 관한) 관련 동향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의 뜻을 표명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태의 진행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음.
- 중국 관영(CC)TV도 이날 뉴스를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해상과 지상에서 군사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며 훈련 장면을 재차 공개했음. CCTV는 보도에서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은 채 선양(瀋陽)군구가 랴오닝(遼寧)성 서해상에서 전시 선박 대피 훈련을 실시했고 전 군부대의 소집된 정찰병들이 지난(濟南)군구 모 야전훈련장에서 실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음. 지난군구의 정찰훈련은 20일 무인정찰기까지 동원해 상당한 규모로 진행됐음. 중국은 이처럼 최근 들어 군사훈련의 장면을 잇따라 공개하는 것에는 한미 연합 훈련에 맞대응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소식통들은 관측했음.
- 한미 양국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군사 조치의 일환으로 25일부터 28일까지 F-22 전투기와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9만7천t급), 아시아 최대수송함 ‘독도함’(1만4천t급) 등 양국 공중 및 해상전력을 대거 동원, 동해상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함. 한편 한·미는 동해 훈련 이후인 8월 말 또는 9월 초 동·서해상에서 고강도의 연합 해상훈련도 실시하기로 합의했음.

● WSJ 中비판 사설…“황해는 공해”(7/21)

- 서해 한미 군사훈련 계획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들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연달아 피력한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사설을 통해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음. WSJ은 21일 ‘황해(서해)에서의 신호들’이라는 사설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 해군의 공해 작전권을 부정하려는 중국의 노골적인 시도는 받아들



여서는 안 된다며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이 최근 중국에 대한 태도를 ‘관심 수준에서 명백한 우려로 바꿨다’고 말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신문은 미국 전투함정이 황해를 비롯해 동중국·남중국해상의 공해를 정기적으로 다니며 훈련을 했다고 그런데도 중국 해군은 최근 몇년간 육지에서 12마일 이상 떨어진 국제수역 내 질서를 규정하는 국제통행법에 도전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 신문은 이어 중국의 군사·정치 이론가들이 해안에서 200km 이내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외국군이 자국 허가를 받아야 조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해양 관습법에 따른다면 미국은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 WSJ은 “중국의 호전적 태도는 부분적으로 동맹인 북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은 천안함 사건이 마치 자연재해나 되는 것처럼 이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하자고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그러나 중국이 서해 훈련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자국 연안에 미군의 접근을 막으려는 장기전략 때문이라며 인민일보의 보도는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지난 8일 1면을 통틀어 한미 훈련 계획 소식을 전하면서 훈련 재고를 촉구하는 등 여러 관영 매체가 잇따라 서해 훈련에 반대하는 기사를 실었다.
-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양국은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상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F-22전투기 등 첨단 전력에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8월말 또는 9월초에는 서해상으로 장소를 옮겨 훈련을 할 계획이다.

● 中전문가들, 한미훈련에 불만 여전(7/21)

-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오는 25일 동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에 돌입한다는 발표에 대해 21일 오전 현재 공식 논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며 한국과 미국을 비판했다. 중국 국방대학 군사전문가 리다광(李大光)은 21일자 신경보(新京報)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합훈련에 준 항공모함급으로 수륙양용 작전이 가능한 아시아 최대수송함 ‘독도함’(1만4천t급)이 참가하는데 주목하고 이는 한국이 동북아에서 해군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 해군군사학술연구소 리제(李杰)연구원은 한국은 독도함을 이번 훈련에 파견, 자국 해군의 작전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번 연합훈련의 격을 높였다고 논평하고 미국 항모 조지워싱턴호와 독도함등 수많은 군함과 전투기들이 좁은 해역에서 효율적인 훈련을 하는데 이번 훈련의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말했다.



- 리제는 미국이 핵 항모와 이지스함의 한반도 해역 진입에 대한 반대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이번 연합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미국이 동북아 사태에 개입, 역내에서 주도권을 장악 하려는 계획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음.
- 한·미는 중국의 강렬한 반대에 직면, 연합훈련 장소를 서해에서 동해로 변경했지만 이는 동북아의 평화에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예상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리제는 역설했음. 중국국가안보정책연구소 리칭궁 부비서장은 이 날짜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가 연합훈련장소를 바꾼 것은 중국의 반대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논평하고 북한도 훈련 장소의 변경으로 압력이 줄어드는 이익을 얻었다고 분석했음. 그는 미국은 이란 사태에 더욱 집중하기위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대북 강경 입장을 지속하면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음. 중국 언론매체들은 그러나 대부분이 신화통신을 인용, 논평없이 한미가 34년만에 최대 훈련을 실시한다고 사실 보도를 했음.

마. 미·러 관계

● 러, 자국조종사 제3국서 美압송에 “납치” 비난(7/22)

- 미국이 지난 5월 하순 라이베리아에서 콘스탄틴 야로셴코(41)라는 이름의 러시아 조종사 한 명을 코카인 밀매 혐의로 붙잡아 미국 내 감옥으로 이송했으나 이는 “사실상 제3국에서 러시아 국민을 납치”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러시아 외교부가 21일 주장했다.
-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웹사이트에서 미국은 야로셴코의 체포 사실에 관해 러시아에 통보해주지도 않았으며 야로셴코를 뉴욕의 한 감옥으로 “비밀리에 강제 이송”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미 국무부에 이 사건관련 설명을 요구했음. 그러나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야로셴코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주미 러시아 영사관들을 만나도록 허용됐다고 20일 상반된 주장을 했음. 지난달 1일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야로셴코는 다른 7명의 공범과 함께 코카인을 미국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음.
- 당시 미국 검찰은 야로셴코가 “천kg 단위의 코카인을 남미, 아프리카와 유럽을 통해 수송”했으며 총 6천kg의 코카인을 반입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러시아 외교부의 주장에 대해 미 마약단속국(DEA)의 단 디어텐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야로셴코는 지난 5월 28일 라이베리아 당국에 의해 구금된 후, 미국 법원이 사전에 발부했던 체포영장에 따라 그 달 30일 DEA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디어텐 대변인은 또 야로셴코가 DEA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 미국 측은 제네바협약 요건을 준수했다고 반박했음.



- 그러나 러시아 외교부는 DEA 요원들이 “현지 경찰과 합동으로” 야로센코를 구금했다고 주장했고, 야로센코의 변호인은 지난 19일 그에 대한 혐의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음.

바. 중·일 관계

● 日대사 “中·日 FTA 협상 빨리 시작해야”(7/23)

-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중국 주재 일본대사는 23일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음. 니와 대사는 이날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중국과의 FTA 협상을 빨리 열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일본은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했음. 사업가 출신의 니와 대사는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초의 민간인 출신 주중 대사임. 그는 “중국이 지도국으로서 자신의 발언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길 기대한다”며 중국이 군비 면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정치와 관련, 니와 대사는 일본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는 상황을 언급하며 “일본의 최고지도자가 1년 혹은 수개월 만에 바뀐다면 어떻게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음.

● 中·日, 27일 동중국해 가스전 협상(7/23)

- 중국 외교부는 오는 27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의 가스전 공동개발을 위한 협상을 한다고 22일 밝혔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하노이에서 열린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간의 양자회담에서 양국은 27일 동중국해 문제에 대한 정부간 합의를 바탕으로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중·일 양국이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지난 2008년 6월 합의이후 2년 만에 처음임.
- 중·일은 당시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선인 양국 중간선에 걸쳐 있는 룡정(龍井, 일본명 아스나로<罌榦>) 주변 해역을 공동개발하고 ▲중국이 단독 개발에 들어간 춘샤오 가스전에 일본측도 출자하며 ▲나머지 가스전 주변 해역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중국은 그러나 춘샤오 가스전의 단독 개발에 나설 움직임을 보였고 일본은 이에 강력 반발,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은 난항을 겪어왔음. 한편 양제츠 부장과 오카다 외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중·일에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음.

사. 기타

● <홍콩언론, 韓美 연합훈련에 ‘관심집중’>(7/25)

- 홍콩 언론은 25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특히 일부 홍콩 신문들은 이번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



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음.

- 명보(明報)는 25일 ‘미군, 은연중 중국 인민해방군을 중요한 위협요소로 꼽았다’(美暗列解放軍爲頭號威脅)라는 제목의 국제면 머리 기사를 통해 ‘불굴의 의지’라는 이름으로 나흘간 동해에서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했음.
- 특히 이 신문은 미군이 한미연합훈련을 하루 앞두고 24일 대만의 중국시보(中國時報) 기사를 하와이 학감공군기지로 초청해 C17 수송기를 취재할 기회를 줬다면서 이 자리에서 미 태평양공군 관계자가 중국시보 기자에 말한 내용을 소개했음.
- 미 공군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태평양사령부와 태평양공군의 임무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대 군사적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세계 최대의 무장부대’와 ‘핵무기’를 제1,2의 위협으로 꼽았는데 이는 명백히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명보는 해석했음.
- 나아가 미국은 이번 한미 연합훈련의 목적을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이 훈련을 통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서해(중국명 황해)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야심을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명보는 주장했음.
- 문화보(文匯報) 역시 ‘한미 오늘부터 연합훈련, 북한 핵억제력으로 대응 위협’(美韓今聯合軍演 朝威脅以核武迎擊)이라는 제목의 국제면 머리 기사를 통해 미 태평양공군 관계자가 하와이 학감공군기지에서 대만 중국시보 기자에 한 발언을 상세하게 소개했음.
- 이 신문은 또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는 주요 무기와 인원 등을 소개한 뒤 이번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을 상세하게 소개했음.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연합훈련과 관련해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당당히 맞서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문화보는 전했다. 영자지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북한, 한미연합훈련에 핵 억제력 위협’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보복성전’ ‘물리적 대응’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 그러면서 이 신문은 이번 연합훈련이 46명의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지게 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봉황위성TV를 비롯한 홍콩의 방송들도 한미 연합훈련 사실을 주요 뉴스로 취급하고 있음.

● 캐나다 외무 “北 전쟁경고, 위협에 불과”(7/25)

- 로런스 캐논 캐나다 연방 외무장관은 북한의 최근 전쟁 위협이 무력의 과시에 불과하며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실제로 도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24일 일간 글로브앤메일 보도에 따르면 캐논 장관은 북한 외무성 관리들이 하노이 아세안지역 안보포



럼(ARF)에서 전쟁경고 발언을 것과 관련,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충돌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북한의 예측을 불허하는 행동은 한국과 그 동맹국들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 관리들은 이번 포럼에서 호전적인 경고발언을 했다. 북한 대표단의 리동일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말 시작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무력외교의 전형”이라고 비난하고 “이는 한반도와 아시아 전역에 대한 위협으로 물리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 달 토론토에서 열린 선진 8개국(G8),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주장했으며 교역중단 등 새로운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음.

● 러시아 “나토와 군사협력 복원”(7/24)

- 2년 전 조지아(그루지야) 전쟁을 계기로 냉각기에 들어간 러시아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의 군사협력 관계가 복원될 전망이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니콜라이 마카로프 총참모장(한국 합참의장 해당)과 나토 군사위원회 의장인 지암파올로 디 파올로 대장은 23일(현지 시각)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하고 양측의 군사협력 관계 복원에 합의했다. 마카로프 총참모장은 “우리는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고자 협력을 구할 준비를 다시 하고 있다”며 “산적인 문제들은 상호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올로 대장도 “앞으로 몇 달간 서방 동맹국들은 2011년을 위해 러시아와 공동 행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해상 탐색구조, 대테러, 아프간 문제에서 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위해 화물과 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 통로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나토 측에 강조했다.



[참고 1] <한미 '2+2'회의 공동성명 전문>(연합뉴스, 7/21)

『6.25 전쟁 발발 60주년 계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의 공동성명 (7.21.서울)

대한민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및 미합중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한·미 동맹을 태동시킨 6.25 전쟁 발발 60주년에 즈음하여 2010년 7월 21일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6.25 전쟁 중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희생과 헌신을 회고하고, 한·미 동맹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켜 왔으며, 강력하고 성공적이며 지속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2009년 6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동맹협력을 양자적·지역적·범세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동맹 관계의 기반이 되어온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양국의 상호 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내 및 동해와 서해에서의 향후 수개월에 걸친 일련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계획 등을 통하여, 북한의 어떠한 모든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미래 국방협력에 대한 동맹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양국 정상들의 최근 결정에 따라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금년도 안보협의회의(SCM) 시까지 완성하기로 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양국간 긴밀한 공조하에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및 역량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이다.

양측 장관들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는 2010년 7월 9일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S/PRST/2010/13)을 환영하고, 그와 같이 무책임한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북한에 대해 동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북한측에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모든 핵프로그램 및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2009년 6월 동맹미래비전에 기초하여 동맹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증대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과학·기술·문화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에 기초한 양국 국민들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할 것이라는 견해를 같이하고, 지역·범세계적 수준에서도 보다 긴밀하고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한·미 FTA의 최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난달 토론토에서 양 정상은 논의한 바와 같이 비준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미래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호혜적으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측 장관들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한 지역협력체제내에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안정 및 번영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또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과 역동적인 동 지역에서 한·미 동맹이 새로운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양측 장관들은 테러리즘·대량파괴무기 확산·금융위기·초국가적 범죄·기후변화·전염병·에너지안보 및 녹색성장촉진 등 범세계적 도전들에 대한 대처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와 관련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개발원조를 통한 안정과 안보의 증진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아프가니스탄 및 세계 각지에서의 안정·재건을 위한 협력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6.25 전쟁의 폐허로부터 몇십년내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재건을 교훈으로 삼아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미측은 한국측의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 파견을 환영하였으며, 한국측은 아프가니스탄의 치안·거버넌스·개발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아덴만에서의 해적퇴치 노력 및 아이티에서의 평화유지 노력을 포함한 여타 분야에서의 한·미간 공조와 협력을 환영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미국이 핵안보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향후 대한민국이 동 정상회의들을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입증되는 바와 같이, 양국이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대처에 있어 상호 견해를 같이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금일의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하였다는데 공감하고, 양국 외교·국방당국간 차관보급회의를 개최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양측은 또한 양국간 전략대화(SCAP) 및 안보협의회의(SCM) 등 기존의 장관급 협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향후 필요에 따라 외교·국방장관회의 개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nomad@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7/21/0503000000AKR20100721126800043.html>



[참고 2]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문답>(7/21)

- 새로운 북한의 공격이 올지모른다고 했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 ▲(게이츠 장관) 지난 몇개월을 돌아켜봤을 때 북한의 승계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어쩌면 도발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천안함 침몰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면밀하게 주시해야하며, 동시에 억지를 강화해야 한다. 어제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설명하면서, 서해와 동해에서 양자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확실한 것은 없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다는 확정은 없지만, 계속 경계해야 한다. 이번 회의는 우리의 단결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아주 강한 동맹이고, 앞으로 계속 긴밀히 협력한다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미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 전작권 전환에 따른 새로운 계획을 올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시까지 완성하기로 했었는데
 - ▲(김 장관) SCM에서 '전략동맹 2015'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전작권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면서 단순히 시기를 연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60년이 넘는 긴 기간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봐 왔던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에 대해 토의해서 (문제를) 찾아냈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은?
 - ▲(김 장관) 명확한 징후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북한 급변사태 발생할 징후는 높다고 생각한다. 이에 관해 한미간에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 미국 내 국방비 감축 요구 거센데, 동맹국에 대한 지원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 ▲(게이츠 장관)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방위비 삭감이 아니다. (군의) 전력구조와 능력, 숫자를 유지하면서, 취약한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등 방위비 내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다. 동맹국 관련, 현재 국방부 내 모든 노력은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 전력이나 군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은 없다.

- 지난달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였는데, 중국 태도에 실망하지 않았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계획인가.
 - ▲(게이츠 장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중국이 찬성한 사실이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대화를 하는 것이 양국의 이해에 부합된다고 생각한



다.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도 지난 해 만났을 때 이에 합의했다. 국방부가 초청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실망하지만, 미래를 봐야한다. 미중간 군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갖고 있다. 물론 중국에 대해 우려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더 대화를 해야 한다.

--한미간 원자력 협정 관련, 핵 원료 재처리에 어떤 입장인가.

▲(유 장관) 한미원자력협정은 2014년에 개정하려고 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변화된 상황을 원자력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원자력의 상업적 목적 외 군사적 이용은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 핵 비확산을 위한 세계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협정 개정은 상업적·평화적 이용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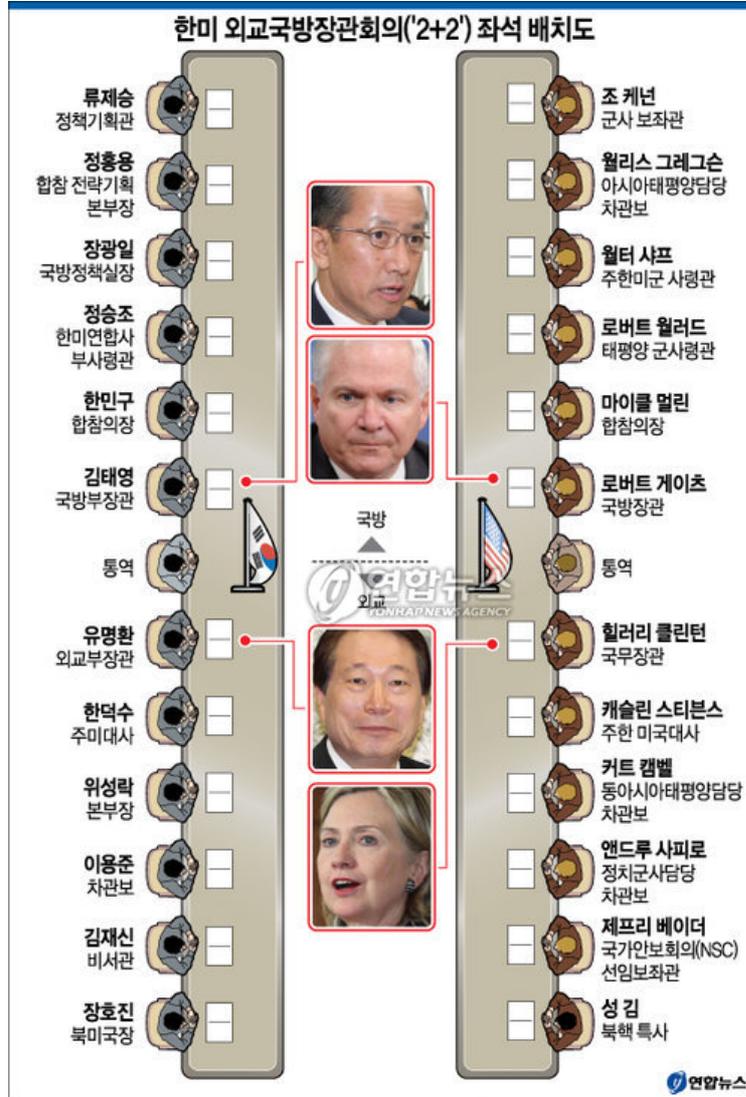
nomad@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7/21/0503000000AKR20100721200900043.html>



[참고 3]〈그래픽〉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좌석 배치도(7/21)



반중빈 기자 bjbinn@yna.co.kr / 20100721
yonhap_graphics@트위터

(서울=연합뉴스) 반중빈 기자 =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김태영 국방장관,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21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올해 안보협의회의(SCM)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bjbin@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0503000004.html>